第284回國會
(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8 號

國 會 事 務 處

2009年11月6日(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2.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비준동의안
3.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비준동의안
4.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附議된案件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1
o 비교섭단체(친박연대) 대표발언 ····· 1
2.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비준동의안 ····· 5
3.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비준동의안 ····· 5
4.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 5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계속) ····· 6

(10시06분 개의)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이종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형오 지금 방청석에는 노철래 의원의 소개로 친박연대 당직자 및 당원 28인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10시08분)

○의장 김형오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o 비교섭단체(친박연대) 대표발언

○의장 김형오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박연대 대표이신 노철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친박연대를 대표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국을 뒤흔들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용산 참사사건,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위법성 논란, 최근에는 4대강 정비사업과 세종시 원안 변경 문제를 놓고 국론은 분열되고 국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국가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임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었으나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으로 인해 국민들은 지난 10·28 재·

보궐 선거를 통해서 독선과 오만을 준엄하게 심판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고 겸허히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보다 낮은 자세로 국정 현안을 대화와 타협, 합의와 포용의 정치로 풀어야 합니다. 소통과 대화합을 통한 정치 안정이 없이는 이명박 정권의 미래도 없으며 우리의 장래도 불투명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가혹한 판결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개인적으로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서 대표의 가족과 친척, 친구와 비서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마는 서 대표가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는 물론 검찰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양심적인 검찰의 수사였다면 여기에서 종결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당의 총선 차입금으로 수사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검찰은 총선 차입금이 작년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47조의2에 명시된 '누구든지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다'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47조의2는 서청원 대표와 같은 공당의 대표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고 선거브로커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서 대표를 정치브로커로 둔갑시켜 사법부는 법의 해석을 잘못하는 누를 범했습니다.

사법부는 당 공식 회계 계좌를 통해 차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사실, 서 대표가 사적으로 착복하지 않았음을 인정해서 판결문에도 이를 적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차입금을 당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며 객관적 증거 대신 주관적 사유와 심증만으로 법관의 양심과 법 상식을 저버리고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또 하나 선거공영제에 의해 국고에서 선거비용을 선거 후에 지원하기 때문에 정당들은 홍보물 인쇄나 광고비용 등 선거비용을 통상 차용해서 써 왔습니다.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은 260억, 민주당은 210억, 선진당은 35억 4500만 원을 차입한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만 처벌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정당들을 친박연대와 똑같은 잣대로 처벌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이렇게 잘못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47조의2를 바로잡아야 하고, 그래서 서청원 대표는 즉각 사면 복권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의 정책은 영속성과 신뢰를 생명으로 합니다. 세종시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열두 번이나 약속한 공약입니다.

세종시 원안이 양심상 어렵다고 생각했다면 아무리 표가 급했어도 약속을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 대국민 약속을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못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무책임한 총리가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 여야가 합의한 세종시법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말 것입니다.

세종시는 대통령과 국회가 입법으로 국민과 충청도민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 약속이 파기된다면 국민 불신은 신뢰 상실로 이어지고 국론 분열이 극에 달해 무정부 상태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과 총리는 세종시를 원안보다 더 발전된 대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꼼수를 어떻게 믿자는 것입니까?

세종시가 경제적 비효율이라면 4대강 사업도 예산의 비효율입니다. 지방혁신도시나 공기업 지방이전도 취소되어야 합니다.

총리에게 경고합니다.

세종시는 법에 따라 토지매입 보상이 끝났고 도시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를 내세운 대통령의 통치이념을 깔아뭉개는 행위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정부입니다.

지금에 와서 경제적 비효율을 문제 삼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지난 정부 시절에는 침묵하고 있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아부였습니까? 아니면 당신들만의 세상 사는 생존방식이었습니까?

권력의 입맛에 따라 약속이 파기되고 소신이 바뀌고 국민에 대한 신뢰가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세종시를 반드시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가 4대강 수질예측 결과 자료의 절반 이상이 왜곡 조작되고 있습니다. 2012년 수질을 예측하면서 4대강 수질을 대표하는 39개 지점 가운데 무려 54%인 21개 지점의 수질 자료를 조작했습니다.

무려 22조 2000억이나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자료 조작으로 국민에게 홍보했다니 세상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2006년 당시 수질을 측정하지 않아 데이터 자체가 없는 16개 지점에 대해 측정치를 임의로 추정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수질 평가를 조작하는 정부가 4대강 환경평가인들 제대로 했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환경NGO의 건의나 각계 전문가 의견을 아예 무시해 버렸고 자연생태계 조사는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문화재 조사는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전 형식적 요식행위로 마쳤고 수중조사는 착공 때 약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들입니까?

또한 공사비 8조 원은 수자원공사에 떠넘긴다는데 수공의 재무구조상 부실이 뻔하고 상수도 요금을 올려 서민 가계를 압박할 개연성이 큽니다. 잘못은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정권유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 예산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위장사업인 시대착오적 4대강 정비사업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은 효성그룹과 관련해 해외법인을 통한 위장거래 비자금 조성, 로우전자 군납 비리, 주가조작 의혹, 조현준 효성사장의 해외부동산 고가매입 등 10여 개 의혹을 자료로 작성하여 1년여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 회장 일가나 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밝혀진 게 없고 형식적인 수사를 거쳐 서둘러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대통령 사돈기업 봐주기'라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업들의 저승사자라고 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 결과라니 어느 국민이 검찰 수사를 믿겠습니까?

이제 조현준 사장이 매입한 LA 소재 주택 450만 달러 등 형제일가의 5건의 호화빌라·주택 구입비용이 무려 1000만 달러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해외부동산 취득 경위와 그 자금출처를 명백하게 밝혀 사법처리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당장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를 하고 그래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미 대화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진전되고 있음은 물론 남북 고위급 접촉설이 정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해서 코미디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남북 간 접촉을 확인해 준 그 시간에 통일부장관은 남북접촉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슨 연예인 스캔들도 아닌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기이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다양한 접촉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역대 정권들도 남북 간의 핫라인을 유지하면서도 성과가 있을 때만 공개를 해 왔습니다. 남북관계는 형식과 실리도 갖춰야 하고 강온 양면전술로 핵 포기를 이끌어 내고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통일을 완성해야 하는데 최근의 접촉 형태는 서툴기 짝이 없습니다.

남북 접촉을 정권 유지의 수단이나 선전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보다 더 진지한 남북관계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아들들이 열악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은 국민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7일 동부전선에서는 강동림이라는 자가 철책선을 뚫고 월북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동림이가 민간인인데 어떻게 군 영내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 군 경계망은 어떻게 피했는지,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합니까?

전방초소는 적외선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등 최첨단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월북한

지 만 하루가 지나서 철책선이 뚫린 것을 발견했고 북한이 강동림이라는 자의 월북 사실을 보도한 뒤 서너 시간 후에야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말 강원도 주문진항까지 귀순자를 태운 북한 어선이 접근했지만 군은 까맣게 몰랐으며 민간인의 신고로 알게 되었습니다. 황강댐 방류 때도 군의 경계근무 태만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군의 경계태세의 현주소입니다. 북한이 작심하고 대남도발을 감행했다면 초전에 박살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상황이 아닙니까?

국방부는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 기강 확립과 경계태세 강화를 약속했지만 점점 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군의 태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명박 정권은 지휘통제권을 대폭 개편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정은 물론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8월 중순 북한을 탈출한 81세의 국군포로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강제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가 5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송환 대책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생이별한 가족들의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누가 어루만지고 헤아려 주어야 합니까?

미국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6·25전쟁 때 숨진 미군 전사자의 유골을 찾기 위해 유해 발굴 비용을 북에 지불하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독일 정치범 송환방식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루빨리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대책을 세워 대북 접촉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잠시 주춤했던 신종플루 감염자가 하루 1만 명 이상씩 증가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에서 초·중·고까지 신종플루 대공황 상태입니다. 전국에 2명 이상 집단으로 감염된 학교가 4개교당 1교입니다. 서울 지역 또한 감염 학생이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대로 감염이 확산된다면 병·의원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돼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어쩌다 우리 보건행정과 방역 대책이 이 지경이 됐단 말입니까? 정부는 즉각 휴교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수업일수 때문에 망설이다 어린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누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감염 확산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 재난 차원의 방역 단계를 격상하여 방역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학부모들 같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교육정책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자주 바뀌어 혼란을 주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점점 입시 공부의 노예로 전락해 학교로, 밤거리 학원가로 끌려 다니며 방황하고 심지어 성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외국어고 존폐 문제, 교원평가제 문제, 사교육비 문제, 대학등록금 문제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총체적 부실입니다. 정부는 당장 모든 교육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가해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모순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도 결국 사교육비에 허덕이는 생계형 저출산 가정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가임여성이 사교육 빚더미에서 고통을 받고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아기를 낳으라고 종용한들 낳고 싶겠습니까? 진짜 심각한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청소년과 부모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의 74%가 학교 반경 2㎞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학교 주변이 성범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 친박연대는 학교 주변 CCTV 설치 확대, 등·하교 문자 알리미 서비스 전면 실시 등 각종 보호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13세 이하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화학적 거세는 물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무기징역 등 중형으로 처벌할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는 밤을 새워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

습보다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18대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결코 여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0여 년간 끊임 없는 도전과 불굴의 노력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룩했습니다.

우리 국회 역시 영광과 오욕의 역사를 거쳐가면서 민주화를 위한 뜨거운 열정과 희생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만개시켰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정기국회를 맞는 18대 국회가 국민에게 사랑받고 존경을 받는 국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노철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2.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비준동의안

3.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비준동의안

4.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10시29분)

○의장 김형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제4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3건을 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장대리 김충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김충환 의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무역 흑자 267억 불 달성으로서 독일에 이어 세계 2위의 무역 흑자국이 되었습니다.

이를 국민과 함께 축하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의결한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3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비준동의안과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비준동의안 등 2건의 비준동의안은 향후 우리나라와 ASEAN 회원국 간의 교역량을 증대시키고 서비스 분야의 개방 수준을 높임으로써 상호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경제 통합을 심화하는 등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은 국제 경제무대에서 새로운 중심 역할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BRICs 국가와 맺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11억 5000만 명의 인구와 세계 4위의 소비시장인 인도라는 거대시장을 경쟁국에 앞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동 협정을 통해 대한민국과 인도 양국 간의 전반적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인도와 정치외교관계 및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추후 중동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첫째, 정부는 한·인도 CEPA 협정과 관련하여 향후 제3-14조에 의한 부속서 3-나의 교환각서 상의 개성공단의 범위를 9.9㎢로 제한한 규정은 수정한다.

둘째, 정부는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이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협정문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국회에 보고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형오 김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기권 3인으로서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2인, 기권 5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계속)

(10시37분)

○의장 김형오 그러면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충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조 의원 민주당 소속 김충조 의원입니다.

불초 이 사람 오늘 이 연단에 올라와서 착잡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약 10년 전 쯤으로 기억됩니다마는 그때는 우리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이상 급 분들이 여기에 와서 발언할 때 이 마이크 앞에서 “국민 여러분!”이라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재선쯤 된 의원이 이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 하고 서두를 꺼냈을 때 저는 한편으로 ‘야, 대단한 분이다. 당당하다. 떳떳하다’라고 하면서 놀랐습니다.

그 이후, 지금 제가 10년 전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 이제 항용 의례적으로 우리 의원들께서 여기 오시면 “국민 여러분!” 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불초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당당함과 떳떳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감히 불초 이 사람은 나름대로 정치를 해 왔다고 하면서도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친근감 있는 칭호를 쓸 수 없다고 하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상당히, 꽤, 일천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국회의 위상이나 기능이나 체통이나 이러한 것들이 10년 전 그때와 조금도 달라짐이 없고 오히려 퇴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우리 국민학교 학생들 표현에 의하면 미분도 적분도 아닌 아주 고도한 수학,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수학적 해법을 내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위법이다. 그러나 그 효력에 대해서는 뭐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국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여기에 계시는 의장님, 그리고 또 부의장님들

도, 이 국회를 대표하는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통척(痛慽)의 심정을 가슴에 지녀야 할 것이며 미디어 관련법은 반드시 이 국회를 통해서 재개정 돼야만 우리 국회 위상이나 자존심이나 체통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가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초반부터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또 톤이 높아진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북한의 핵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제적인 화두가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8000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했습니다. 이제 핵능력에 관해서 단계적으로 강화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6자회담에 언제 복귀할 것이냐, 궁극적으로는 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평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길이 이렇게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그렇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10월 5일 원자바오 총리와 김정일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경제협정을 맺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경제원조를 하겠다, 경제교류 활성화·관광교류 활성화 등등 해서 이 협정을 상당히 내용 있는 것으로, 맺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예삿일로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협정을 통해서 지난 6월 12일 체결되었던 유엔의 대북제재의 1874호가 무력해졌다 이 말입니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이 유엔 제재를 통해서 북핵을 해결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결국 중국을 떠나서는, 중국이 북과 유착되는 한 북핵 해결의 길은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8월에 김정일 위원장은 클린턴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북미회담의 기초적인 터전을 닦았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원자바오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북과 중국이 견고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때 북핵문제의 해결은 더 멀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국면에 당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비핵 개방 3000이나 떠들면서 경색된 자세로 북한에 임해야 될 것인가?

중국은 신압록강대교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 두만강 쪽에도 나진·청진과 나름대로의 경제구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 버리면 그나마 남북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도 없을 것이고, 남북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더욱 멀어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위치해서 총리를 뵙기가 처음입니다.

지난 9월 21일 날 말이지요, 미 외교협회에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 연설에서 그랜드 바겐이라고 하는 것이 표명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알고 있습니다.

○김충조 의원 그 내용을 총리보고 답변하라 그러면 또 답변이 길 것…… 그 내용이 결국 기존에 포괄적 패키지를 주장했던 오바마 대통령이나 또는 그동안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지금까지 죽 10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돼 왔던 일괄타결이나 다른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랜드 바겐하고?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랜드 바겐하고 기존의 포괄적 접근방안 또는 포괄적 패키지라고 불리는 내용과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조 의원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을 마치 새로운 정책 제안이나 하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굳이 이렇게 얘기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봅니까?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이와 같은 그랜드 바겐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새로운 대북 정책인 것인 양 발표를 하고 나니까 국제 언론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김충조 의원 아니, 제가 묻지 않았어요. 물을 때 답변해요. 물을 때만 답변하세요. 아셨습니까?

어떤 냉담한 반응을 보였느냐? 내가 모호하게 하는 얘기 아니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지난 21일 외교장관회담이 끝난 뒤에 '솔직히 말해서 그랜드 바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 제가 영어가 서툽니다만 그 부분이…… 'not really familiar' 이렇게 말했어요. '잘 모른다, 이 내용을.'

그리고 또 22일, 이언 켈리 미국 국무부 대변

인은 뭐라고 했느냐? 정례 브리핑에서 언론인들이 여기에 관해서 질문하니까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일 뿐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그것은 'his policy'고 또 'his remarks'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국제외교상 결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비슷한 내용의 다른 이름이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실무자들이 '잘 익숙지 않다' 또는 '처음 듣는다' 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간의 일시적인 소통 부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스타인버그라고 하는 부장관이 오셔서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김충조 의원 저기, 묻는 말에만……

아니, '미국과 한국이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답변을 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한국의 그랜드 바겐 아이디어가 미국 실무자들의 출장 중에……

○김충조 의원 한국과 미국의……

요약해서 답변하세요.

한국과 미국의 공조관계,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시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습니다.

○김충조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충조 의원 그러면 평소에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공조의 틀 안에서 서로 사전 조율하고 사전 협의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소통이 없었다?

소통이라는 용어는 남한하고 북한하고나 할 때 소통, 소통해야 되지. 이미 소통 단계를 몇 배나 뛰어넘은 게 미국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한덕수 대사가 밝혔듯이 그 며칠간 우리의 아이디어가 저쪽에 스며들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충조 의원 6자회담이 지금 사실상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충조 의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전에 총리가 '소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소통은 남북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대화가 거의 단절됐다시피 됐기 때문에 남북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한미 공조는 탄탄하게 다져 나가야 되고 또 무시할 수 없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조율의 어떤 기회를 마련하는 입장을 취해 가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김충조 의원 그래서 이러한 한미 공조, 남북 소통, 한중 조율,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취한 태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또 활동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정부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정상 또 외교장관 등 다양한 수준에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면서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으며 북핵 문제의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이 어려운 만큼 남북대화 과정에서도 북핵 문제를 우선해서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조 의원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지금까지 몇 차례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

○김충조 의원 파악 못 하고 계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다시 한번……

○김충조 의원 마흔한 차례 정도 정상회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조 의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정상회담을 몇 차례 하셨느냐고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제가 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조 의원 여러 차례가 아니지. 수십 차례라고 그러셔야지. 제가 마흔한 차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십이지, 어떻게 그것이 여러 차례예요?

마흔한 차례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세계 정상들하고는 마흔한 차례나 많은 정상회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는 것이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또 한국, 한

반도 평화를 바라는 많은 시각들의 관심사이고.

그런데 요즘 흘러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는 바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김충조 의원 전혀 모르시네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제 자신은 모릅니다.

○김충조 의원 오늘 총리를 통해서 이 얘기가 좀 무슨 가닥이 잡히려나 했더니 또 틀렸네요, 그것이요.

지금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랜드 바겐은 그동안 일괄타결 방식이나 또는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던 포괄적 패키지 방식이나 그것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습니다.

○김충조 의원 그런데 마치 이것이 그랜드 바겐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제시함으로 해서 일종의 혼란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외교력을…… 이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 홍보하다 보니까 또 외교력이 소진돼요. 맞지요?

이것은 비소모적이다……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다. 제가 지금 거꾸로 말했어요. 이것은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소모적이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는 바입니다.

아까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그것이 맥이 같은 것이다,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총리,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톤이 좀 높아서 미안합니다.

그랜드 바겐이 됐든 포괄적 패키지가 됐든 일괄타결이 됐든 이것은 단계가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폐기는 소위 불가역적이다. 제가 이번에 질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알았는데 'irreversible', 전환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또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하는 것은 가역적이다, reversible,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이명박 대통령께서 단번에 어떻게 되는 것인 양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는 것은 그동안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핵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6자의, 한국을 제외한 5자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이루어 왔던 성과에 대해서도 아주 점수를 깎아내리는 이런 일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반드시 북한 핵 문제는 말과 말, 약속 대 약속, 행동 대 행동,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이번의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얘기는 다분히 혼란을 자초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시겠습니까?

16분,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이런 시간에 대정부질문하는 것, 대정부질문……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3분지 1도 얘기를 못 했네.

죄송합니다, 혼잣말해서.

아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 외교협회의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영어 발표문을 보면 북한이 북핵의 중요 부분을 폐기하고 나면…… 'first'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폐기하고 나면 그다음에 안전 보장과 국제 지원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이 제가 지금 얘기한 것과 같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6자회담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이고, 다만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아까 그랜드 바겐을 질문하셨는데 그랜드 바겐의 기본적인 구상은 북한이 시간을 끌면서 비핵화의 과정을 자꾸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충조 의원 그런 것일수록 미국과는 당연히 사전 조율을 했어야지요.

그래서 그랜드 바겐이 잘못하면 말이지요, 좀 순조롭게 6자회담이 열릴 기미가 보인다 싶은 이 시점에서 갑자기 그랜드 바겐 얘기가 튀어나온 것이 되어 가지고……

어제 누가 그러대요, 저보고요. '그랜드 바겐'이 잘못하다가 '그랜드 바'가…… 바(bar)라고 있잖아요? 장애물. 그랜드 바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 쪽에서는 '비핵 개방 3000' 이것이 대북의 흔들림 없는 정책 기조다 이런 얘기를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은 장관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조 의원 시간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8일 장관께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조찬에서 '북한은 적화통일의 야욕을 접지 않고 있다. 핵 개발도 그 준비선상에 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하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조 의원 그러면 이 중요한 시점에 장관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면, 북한이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한국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고 강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북한 핵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직접 당사자가 바로 우리 한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씀입니다.

○김충조 의원 북 핵의 당사자가 한국이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적화통일은 노동당 규약에도 아직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지적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조 의원 아프간 파병 문제에 대해서 말이지요, 2007년 7월에 발생했던 샘물교회 사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조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탈레반은, 탈레반의 압력에 못 이겨 가지고 우리가 부대를 철수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탈레반이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파병을 시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데 꼭 파병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사실관계를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리면 그 당시 2007년 12월에 동의·다산 부대를 철수할 계획을 정부가 갖고 있었던 거라는 점을 확인해 드리고, 이번의 아프간 파병은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규모가 10위권에 들어가고 우리가 G20 국가의 주요 멤버가 된 이 시점에 우리도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도리다라는 그런 큰 대외정책의 흐름 속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김충조 의원 지난 10월 30일 우리 민주당을 방문하셨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조 의원 제3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아프간에 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그런 요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김충조 의원 아프간의 정정은 나날이 나빠지고 있고 탈레반이 아프간 주민들의 한 60～70%를 포섭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조 의원 이 위험한 때 꼭 파견을 해야 되는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물론 그런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서 나라를 재건했듯이 우리도 이러한 국제사회 위치를 감안할 때 이제는 우리도 그러한 국제사회에 의무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조 의원 과거의 샘물교회와 같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러한 사건은 매우 불행한 사건이고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조 의원 아프간 파병이, 우리 파병되는 요원들이나 병력의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로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우리 병력이 아프간에 파견되어 가지고 불가피한 교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충조 의원 그런데 꼭 파견을 해야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조금 아까 외교부장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저희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파병을, 이 파병은 사실은 파병보다는 거기에 나가 있는 저희 PRT가 그런 인도주의적 임무를 수행할 때 그것을 방호하기 위해서 저희 군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아프간을 저희가, 그 안의 탈레반을 제압한다든가 어떤 지역을 확보하는 임무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충조 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형오 의장, 이윤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통일부장관을 나오시게 해서 인도적 쌀 지원에 대해서 물을 게 많은데 이것 큰일 났네요.

어제 총리께서 북한의 쌀 지원하고 쌀값 하락 문제하고 어느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그것은 별

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요지로 답변한 것을 듣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마는.

발언 안 할 때 계침이 자꾸 흘러가면 안 돼요.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참 대접받는 전직 지도자는 아무리 나빠도 평화가 좋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전쟁은 최악의 것이다.

J. F. 케네디도 그랬습니다. 인류가 전쟁을 막지 못하면 언젠가는 전쟁이 인류를 종말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내치의 잘못은 다음 선거의 패배로 끝날 수 있지만 외치의 잘못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마는, 준비된 질문의 2분지 1도 제대로 질문하지 못하고 이 자리를 물러나게 된 것이 아주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시대상황, 국제상황의 추이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때야말로 이제는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시간을 넘겨서 죄송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김충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구상찬 의원님 소개로 서울 강서 갑 지역구민 쉰 분, 50인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이시종 의원님 소개로 충주녹색어머니회 학생·학부모 열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국회 직원 가족 초등학생 7명도 방청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은 구상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일이면 겨울로 들어선다는 입동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에게 가장 서러운 계절은 겨울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모두들 경제 위기를 이제 막 벗어나고 있다고들 합니다만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외되고 그늘지고 외로운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보살핌의 복지제도가 촘촘히 짜여져 이제는 소외되지 않고 외롭지 않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위기, 복지제도의 상실 같은 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 문제, 우리들의 안보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들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면서도 아무도 그 위험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는 우리들의 담대함에 가끔씩 저는 놀라기도 합니다.

경제 위기 그것은 우리가 자초한 일도 아니고 또 세계 모두가 겪는 일이라 논외로 칩시다. 그러나 한반도의 핵 문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스스로 묶어 버린 자승자박의 꼴이라 그 심각성이 더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북한이 핵 실험을 해 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녀도 그것을 막기는커녕 못 본 척하고 말았습니다.

핵을 가지고 온갖 공갈을 쳐도 말 한마디 못하고 무엇을 얼마나 더 퍼 줄까, 북쪽의 환심 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 불쌍한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 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항의하는 우리 국민들을 구속시켜 버리는 정권, 입고 있던 속옷까지 벗어 주지 못해 안달이 났던 정권, 그런 정권이 물러갔지만 진정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북한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안보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500년 전에 썼던 북한의 수공에 우리 국민들이 임진강으로 떠내려가는 어처구니없는, 그리고 목숨을 잃어 버린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돛단배를 타고 주문진 앞바다를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모르고 있는 정부, 민간인이 벌건 대낮에 휴전선 철조망을 뚫고 월북을 했는데도 새까맣게 모르고 있다 북한 방송을 듣고 이제서야 아는 정부, 더 한심한 일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을 주관해야 할 통일부장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외무부장관은 신문을 보고 아는 정도……

어떤 국가가, 어떤 민족이, 어떤 시민이, 어떤 국민이 이런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외교·안보 문제를 보면서 정부 외교·안보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안보에 관한 긴급 현안이 발생했을 때 관련 기관과 부처가 즉시 대응 태세를 갖추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외교·안보 라인의 안보 의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외교·안보 라인의 성층권에 군 미필자가 너무 많습니다. 국무총리 군대 안 갔다 와, 청와대비서실장 군대 안 갔다 와, 청와대정책실장 군대 안 갔다 와, 청와대정무수석 군대 안 갔다 와, 국정원장 군대 안 갔다 와, 그래서 지식과 두뇌는 있어도 경험이라는 필드 매뉴얼이 약한 외교·안보 라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총리, NSC가 뭔지 아시지요, National Security Council?

○국무총리 정운찬 예.

○구상찬 의원 그것 다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집에 관해서 대통령께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구상찬 의원 다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현재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구상찬 의원 청와대 내에 안전보장회의를요.

○국무총리 정운찬 대통령이 의장이 되시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상찬 의원 알겠습니다.

총리께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일련의 내용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없습니다.

○구상찬 의원 총리, 지금 국민들은 싱가포르 비밀접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투명성을 바탕으로 정상회담이 추진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대북정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 우리가 충분히 목도한 사실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를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후보 시절에는 국민의 합의 없이 투명하지 않은 어떤 회담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구상찬 의원 또 작년 3월 26일에는 국민 뜻에 반하는 대북협상은 없다, 남북 간 문제는 매우 투명하게 풀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상찬 의원 그런데 이번 싱가포르 비밀접촉은 그간 정부가 밝혀온 원칙과 많이 다릅니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 사용되던 비선을 통한 비밀접촉과 다를 바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비밀접촉이 언제 어떤 경로로 접촉하게 됐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그 비밀접촉에 대해서 들은 것이 없습니다.

○구상찬 의원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정원에서 북한을 담당하는 부처가 3차장 산하에서 1차장 산하로 옮긴 것은 그러면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구상찬 의원 그러면 국정원의 모 차장이 지난 10월 말 세 번째 주말에 싱가포르에 다녀오신 것 보고 받으셨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구상찬 의원 확인해 줄 수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현재는 보고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구상찬 의원 남북대화를 국정원에서 담당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통일부에서 담당하는 게 좋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투명하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상찬 의원 그러면 전혀 싱가포르 접촉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바가 없으시군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구상찬 의원 어제 총리께서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 질의 중에 당시에 그러면 왜 세종시안에 반대하지 않고 침묵했느냐고 묻자 총리께서는 아주 이례적이고 이색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고향이 충청도라 그랬다.

노련한 총리라면 그렇게 답변 안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남북대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구만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현재로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구상찬 의원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남한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1~2년 동안 비방과 무력시위를 한 뒤에 정상회담을 미끼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또 이번 남북정상회담 제안도 그러한 전술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구상찬 의원 총리는 빨리 남북관계 현안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겠습니다.

○구상찬 의원 들어가십시오.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투명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의제 선정이 분명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둘째 의제는 국군포로와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답방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라는 답방에 대한 합의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서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 너무 무관심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북한을 탈출한 수많은 탈북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선양 총영사관에 납북자 가족 3명이 1년째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심양에 81세의 국군포로가 아직도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국군포로, 납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했다가 다시 강제로 북송되어 인간 이하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군포로는 강제로 북에 끌려가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는 이미 국가도 아닙니다.

본 의원이 미군 지휘관으로부터 들은 얘기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미군은 세 가지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임무에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계 최첨단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 둘째는 군인들 중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서든 죽어서든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 세 번째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크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국은 당신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구호 아래 30년 40년 전에 실종된 미군들의 유해를 끝끝내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해를 가족과 국가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는 태평양전쟁에서 사망해 65년간 차디찬 태평양 바다 속에 잠겨 있던 한 미군 병사의 유해를 찾아 가족들에게 돌려준 것은 수많은 미국사람들에게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홍보하고 있지만 애국심은 그런 홍보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가만이 국민에게 애국심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 우리는 왜 국군포로, 납북자들, 이런 탈북자들을 조국의 품으로 데려 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탈북자와 국군포로의 인권에 대해 이렇게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심양에 있는 81세의 국군포로, 1년째 심양 총영사관에 있는 국군포로 가족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제가 구 의원님 생각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나 또는 정부의 각료로서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부는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저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의원 며칠 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신대북 3원칙을 제안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규모 경제협력은 반드시 핵 문제 해결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신대북 3원칙 중 504명으로 추정되는 납북자와 750명의 국군포로의 송환을 전제로 하는 인도적 상호주의에 대해 본 의원은 100% 동의합니다. 장관도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구상찬 의원 본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504명의 납북자와 750명의 국군포로를 송환한다면 양보할 수 없는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전원 송환이 이루어진다면 판문점이나 평양에서 개최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전원 송환과 장소를 맞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본 의원은 직접 그분들을 눈물로 설득하겠습니다.

장관, 지난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한 대가를 주고 이들을 데려오는 독일 정치범 송환방식, 즉 프라이카우프를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독일이 했던 그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저희 현실에는 좀 맞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소위 독일의 프라이카우프적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상찬 의원 과거 독일이 비용을 지불하고 정치범을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시켜 통일을 앞당겼다면 우리는 정상회담 장소와 납북자, 국군포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라도 한국판 프라이카우프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 들어가십시오.

외교는 흔히들 100년을 바라보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외교는 계획적이고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교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도 문제, 대륙붕 문제, 아프간 파견문제 등 골치 아픈 외교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면 외교부는 정신없이 이곳저곳 급한 불부터 끄는 소방차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준비 때도 장관이 국내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고 1박 2일의 베트남 출장을 떠난 것도 급한 불부터 끄려는 소방차 외교의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외교목표는 무엇이며 무엇을 얻고자 함입니까? 청와대나 외교·안보 라인이 저질러 놓은 상황을 장관이 뛰어다니면서 뒷정리만 하는 설거지 외교, 급한 불만 먼저 끄고 보려는 소방차 외교,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국방부장관, 장관 그냥 앉아 계세요, 시간 때문에. 그냥 앉아 계세요. 시간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야가 함께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장관이 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어느 장관도 손대지 못한 납품비리 의혹사건을 파헤치고 또 방위산업체의 관례적인 예산부풀리기에 철퇴를 가하고 계신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철통같은 DMZ 경계와 물샐 틈 없는 해안 경비로 다시는 경계의 허점으로 군이 망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여 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물리는 요충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에 힘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한반도가 갈등과 충돌의 장이 되어야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외정책은 민족 생존과 직결합니다. 100년 전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것도 전쟁에 패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외교전략에 먹힌 것입니다. 독일이 주변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일을 이룬 데는 탁월한 외교력이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수 년 동안 막연한 감상으로 실체도 없는 공허한 자주를 외치다 우방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외교와 안보는 국가 생존의 두 바퀴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듯이 안보가 흔들리면 대화와 협력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효과적인 대북정책과 통일도 안보의 힘이 뒷받침할 때 가능한 겁니다. 외교·안보 라인에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빨간불에서도 길을 건너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옛 말씀에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라 했습니다. 천하가 비록 평안하다 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는 준비된 사람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위기, 북한 핵 위기,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 불신, 그로 인해 생긴 대립과 갈등 등 많은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모적 정책과 갈등을 증폭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위기 극복의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위기 앞에 정쟁과 분열을 일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옛 선현들의 말씀에 강자가 후한 법이고 승자가 양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에 아름다운 승복은 있었지만 아직 아름다운 동행은 없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구상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안내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경북 성주군에서 이인기 의원의 소개로 지역구민 서른여덟 분이 오셨습니다.

다음 김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국무위원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여수 갑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다.

제가 이제 정치생활 꼭 10년째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정치를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 여수의 발전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첫째, 갈라진 7000만 남북 동포를 하나로 만드는 일, 둘째 700만 해외동포를 한마음으로 보듬는 일, 셋째 이 하나된 우리 민족이 세계평화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질문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외교장관 나와 주십시오.

제가 재외동포들을 만나보니까 우리 동포 하나하나가 우리의 외교관이요, 우리의 수출 거점이요, 우리 문화의 전도사였습니다. 이 700만 재외동포의 역량을 앞으로 어떻게 잘 살리느냐가 우리 한민족 도약의 큰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재외동포재단은 이 700만 해외동포를 보듬기에는 용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많은 재외동포들이 동포청 신설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 MB정부는 여기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에 대해서 그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계속 검토해 나갈 현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문제가 뭐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김성곤 의원 그것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현실적으로 재외동포청을 현재 재외동포재단하고 외교부의 기능을 합하는 것만으로는 별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의 기능을 전부 한 곳으로 모아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효과적일 수 있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의문사항이 꽤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외교부에서는 이 재외동포청을 만들 경우에 외국과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이걸 외교부 산하에 두지 말고 필리핀이나 인도처럼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산하, 아니면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면 문제가 좀 다소 해소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그것이 과연 재외동포청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나라가 과연 있는지 하는데 한두 나라를 빼놓고는 기본적인 재외국민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지금 재외동포청이 진척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과연 어느 것이 재외국민의 지원이라든가 통합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곤 의원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향에서 병들고 보살펴줄 사람 없을 때 이것처럼 서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당 박주선 의원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외국민에게 질병이나 상해 시 인도적 의료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국

가유공자 등에게는 의료보험 없이 치료해 주고 있는데 이 제도를 어떻게 받아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재외동포에 대한 의료지원 문제는 지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의료뿐만 아니고 재외국민의 교육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예, 적극 부탁드립니다.

이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로 지금 여러 가지 염려가 많습니다. 저는 이 참정권의 행사가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작용도 지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나 한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 한인회가 각종 국내 선거로 분열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회를 관장하시는 외교부가 이 한인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복안 갖고 계신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저희들로서도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도 지난 2월 달에 재외국민 참정권 법제화를 할 때 좀더 깊이 다뤄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그 문제를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한인회도 그렇고 특히 재외공관은 투표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LA의 김 모 영사는 한나라당 BBK 해외대책팀장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인구가 제일 많은 LA에서 정치적 중립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재외공관원의 선거중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만한 인사는 대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를 확립하고 거기에 따른 지휘 감독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재외공관에서만 지금 투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리의 관계로 많은 재외동포들이 우편투표 혹은 전자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가능성은 정부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정부로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마는 다만 금년 1월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현재로서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국회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불법선거운동 관리 이것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의원 우리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김성곤 의원 대책이 뭡니까, 우려만 하지 마시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래서 현지 공관을 통해서 각 교민단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견교환을 통해서 지금 그런 데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김성곤 의원 제가 열린우리당 시절 우리나라 외교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 외교인력의 대폭 강화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유능한 외교관 하나 하나가 월급의 수십 수백배 국익을 창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인력은 일본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향후 외교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절대 필요한 외교인력의 숫자가 얼마이며 그 인력 충원의 문제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해 가지고 외교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앞으로 3개월 내에 정책 건의를 하고 국회에도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외교부는 1900명 수준이고 일본이 5500명 수준입니다. 저희들로서 가급적 5년 이내에 최소한 3500명 수준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뒤에 계신 정운찬 총리께서 이 문제 좀 심각하게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프간 파병 문제, 앞으로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다루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원칙만 말씀드리겠

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영향권하에 오래 있다 보니까 대이슬람권 정책이 미국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세계평화를 위한다면 우리의 친구 미국을 향해서 대중동 정책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저는 친구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만날 미국은 이슬람권과 충돌만 합니까? 이슬람권의 저항은 사실 서구에서 만들어 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친구로 만들라고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 저는 우방으로서의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카이로 연설 또 터키 방문 또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슬람과의 관계 강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우리도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올해가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의하면 한·중·일 3국이 동양평화회의를 설치하고 3국 공동은행을 만들어 공용화폐를 발행하고 3국의 청년들로 공동의 군대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유럽공동체처럼 우리도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서로 주도국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이 중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한·중·일 간에 3국 간의 협력의 강화 필요성에 따라서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한·중·일 정상이 그동안 아세안 주변에서 회의하던 것을 벗어나서 후쿠오카에서 1차 회의를 했고, 지난 10월에는 북경에서 3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했고, 내년 2월 초에는 한국이 주관을 해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안중근 의사가 지하에서 기뻐하도록 열심히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여수박람회를 유치하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해양환경과 기후 변화에 이바지하는 여수 프로젝트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201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우리 한국의 박람회 개최지인 여수로 유치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기를 정식으로 외교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마침 2012년에 아시아에서 열리기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 문제는 이미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세종시의 '세'자만 나와도 이제 지겨우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명품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우리나라 지명들은 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총리의 고향이신 '공주'가 왜 공주인지 아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

○김성곤 의원 인문학은 공부 안 하셨네, 경제학만 하셔 가지고.

공명정대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주입니다. 공명정대한 땅이다.

'충주'가 왜 충주인지 아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요, 충절입니까?

○김성곤 의원 그렇지요. 충신이 많이 나는 주다 해서 충주입니다.

우리 충청도에 이순신 장군, 유관순 열사, 이런 충신이 많이 난 것도 충청도 이름이 '충'자가 들어가서, 다 이렇게 지명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세종'이 왜 세종인지 아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요.

○김성곤 의원 아니, 경기고 나오시고 서울대까지 나오셨는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가르쳐 주십시오.

○김성곤 의원 세종대왕 때문에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세상 세(世)자에다가 마루 종(宗)자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성곤 의원 세상의 중심이 된다 이런 뜻입니

다, 세상의 중심. 이것 그냥 나온 이름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기가 계룡산 영기가 서린 곳입니다. 그래서 이태조부터 박정희 대통령까지 수도를 이쪽으로 옮기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충절을 중요시하는 충청도가 지금 뿔이 난 겁니다.

하여튼 이 지명의 뜻을 잘 새기셔 가지고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이 참정권 부여로 700만 재외동포, 특히 투표권을 행사하는 250만 동포의 역량을 한 데로 모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졌는데 이 여당이, 죄송합니다. 마치 대선 승리의 기회로 만든 것처럼 엄청난 조직을 만들어서 벌써부터 지금 선거 분위기를 흐리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도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나라당은 재외국민특별위원회 또 중앙위원회 해외동포분과, 국제위원회 또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외국민국, 또 미국 현지의 US한나라포럼, 여러 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10월 2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재외국민특위는 소속 위원 113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특위를 만들어 전 세계를 8개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로 10여 명의 국회의원을 임명하였다고 합니다. 공성진 의원 미국, 나경원 의원 중남미, 이병석 의원 아시아 등등, 죄송합니다.

여기 명함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모 동포한테 받은 명함입니다.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해외동포분과 A나라 위원장 K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리, 현재 정당법상으로는 해외지부를 둘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중앙위원회는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조직입니다. 여기에 해외조직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은 선거 관련 주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의원 제가 총리한테 미리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준비 안 하셨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지난 2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따른 해외조직 구성 문제 등 정당법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관련조항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아니, 그러니까 총리께서 머리가 좋으시니까 그냥 이성적으로만 판단해 보세요, 이성적으로만.

선거법상 해외조직을 못 만들게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해외조직 책임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명히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

○김성곤 의원 잘 모르시겠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물론 저희 민주당도 향후 해외조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법을 고친 다음에 조직을 하려고 사실 기다리고 있는데 여당이 이렇게 먼저 물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여당은 재외동포를 표밭으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이 해외조직에 관한 법을 어쨌든 빨리 손질하시기 바랍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총리, 몰라도 좋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만…… 논리 아시지요, 뭐가 논리인지? 논리적으로만 답변하십시오.

현재 선거법상 국회의원 혹은 후보자가 지역구민들에게 선물을 돌리면 기부행위에 해당돼서 선거법상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총리, 특정 정당이 잠재적 유권자인 재외국민들에게 선물을 돌린다고 하면 이것은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위반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

○김성곤 의원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하세요. 법 펼칠 필요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논리 공부한 애도 이것은 답할 수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요, 어느 규모이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성곤 의원 규모?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역구민들한테 한 5만 원 주면, 10만 원 주면 안 걸리고 100만 원 주면 걸립니까? 10만 원에 그만두신 분들 많아요.

○국무총리 정운찬 큰 규모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의원 작은 규모는 되고요?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요, 예를 들어서 뭐……

○김성곤 의원 선거법 무서운 줄 모르시네요, 선거 출마를 안 해서.

제가 얼마 전 재외동포들을 초청한 어떤 모임에서 모 한나라당 의원님이 재외동포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을 봤습니다. 날짜와 장소, 증거물이 다 있습니다마는 제가 차마 선관위에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이고 또 모처럼 모국을 찾은 재외동포들을 상대로 해서 선거법 위반 시비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고합니다.

앞으로 해외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외를 방문해서 동포들에게 향응 공세, 선물 공세 하는 것 이것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정치의 흙탕물을 동포사회에까지 수출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성곤 의원 그것은 동의하시네요.

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민주평통조직의 중립성 위반입니다.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에 의한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총리, 1만 7000명이 대통령한테 자문한다는 것,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효율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성곤 의원 효율적이지는 않아 보인다? 효율만 자꾸 강조하시네요.

앞으로 헌법 바꿀 때 이름을 차라리 고치세요. 1만 7000명 자문기구라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평통 14기가 13기에 비해서 한 1000명 증가했는데 그중에 재외동포가 한 600~700명, 또 더구나 한나라당 출신 사무처장이 14기 자문위원 중 다른 범주의 숫자는 다 줄이고 자신이 무려 1667명을 추가로 넣었어요. 이것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 자세한 구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09년에 위촉된 14기 민주평통자문위원이 1만 78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정부 때 규모와 대등한 겁니다, 그 숫자는. 12기 때는, 다시 말해서 2005년에는 1만 7193명이고 13기 2007년에는 1만 6791명이었고 지금 14기 2009년에 1만 78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말씀하셨듯이 헌법에 기초해서 설립된 평화적 통일정책에 관한 범국민적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따라서 민주평통의 정치적 중립성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의원 말씀 잘하셨어요.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의장인 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평통 수석부의장인 이기택 씨, MB 캠프에 있던 사람이고 평통 사무처장 김대식 씨, MB 캠프에서 네트워크 팀장 하던 사람입니다. 그 밑의 연구위원도 친한나라당 사람입니다. 이렇게 상부조직이 친한나라당 중심으로 돼 있는데 중립을 지킬 수 있겠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요,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만 민주평통은 그 위상에 맞게 초당적 또 초정파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처음 듣는 것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바로알기'라는 책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6·15 선언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했고 10·4 선언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 무책임한 합의다."

또 그다음에 만화 한번 보십시오.

돌아가신 두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사이에 맺은 합의를 완전히 폄하하는 홍보책자이고, 홍보 수준이 아니라 한나라당 당보 수준의 그림입니다.

총리, 이래도 평통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 책자에 대해서 저도 들었습니다만 민주평통 측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잔여분을 전부 폐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이미 그 책은 다 돌렸어요, 폐기하기 전에. 그러면 그 책을 만든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 그래서 민주평통사무처장이 민주평통 국정감사에서 이 책자와 관련해서 표현이 거칠고 서툴렀으나 김 전 대통령을 폄

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의원 어쨌든 잘못된 것 인정하셨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평통법 일부개정안에 의하면 민주평통 인원을 7000명에서 2만 명으로 증원하고 사무처장을 정무직으로 격상하고 자문위원들한테 활동비까지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또 '통일무지개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 10만 통일 일꾼을 양성하고 232개의 지역협의회를 만들고 이것을 700만 한민족 네트워크 사업과 연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MB 측근인 평통 김대식 사무처장이 지난 4월 3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민주평통 해외지부 확대와 700만 해외동포 네트워킹은 서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평통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그러면 조직 확대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앞에서 자료를 봤듯이 이렇게 전 정권을 폄하하고 정치적 중립을 잃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결국은 MB의 친위대를 만드는 그런 시도다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의원 시정하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 평통을 국민적 통일 의지를 모으는 그런 통일기구로 만들려면 수석부의장이나 사무처장, 연구원 이런 사람들을 전부 중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동의합니다.

○김성곤 의원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당 출신들 앞으로 좀 중립적인 분으로 모셔 갖고 정말 우리 민주평통이 통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는 7700만 동포를 하나로 모으는 우리의 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 그것은 한민족 문화로 보면 어떨까요? 언어나 역사, 사상, 생활 관습 등이 문화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4500만 남한 동포는 지역을 넘어서 하나 돼야 되고, 7000만 남북한 동포는 이념을 넘어서 하나 돼야 됩니다. 700만 해외 동포는 5대양 6대주를 넘어서 한마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의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 이것이 우리의 천명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김성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의원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남구을 출신의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김태영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대남적화라는 북한의 군사정책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 내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인 변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예, 그러면 북한이 통일을 한다며 핵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전제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하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 핵을 투척한다면 어떠한 방법들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핵을……

○윤상현 의원 투척한다면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핵을 투입한다면 크게는 저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공군기에 의한 투척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미사일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장거리 미사일로 핵을 투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개략적인 정보는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북한이 HEU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는 징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 부분은 우라늄 농축은 극히 작은 시설만이 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보는 대단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플루토늄하고 다르게 우라늄 농축은 정확한 정보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상현 의원 북한군은 비대칭 전력에 있어 한국군에 비해 절대 우세에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안보의 핵심 위협요인이라는 데 동의하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중요한 위협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윤상현 의원 그렇다면 최소한 이에 대응할 비대칭 대량 보복 전략이 있어야 하고 그를 뒷받침할 전략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 미사일, 정밀타격무기, 조기경보기, 원자력 잠수함, 군사위성 등 무엇 하나 변변한 전략무기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여러 항목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일부 항목은 저희가 갖추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 항목은 아직 저희가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래서 합참에서 얘기하는 대로 한미연합전력으로 북한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미 측의 지원을 받는 가운데 한미연합전력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2012년 전작권 전환을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고집한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정확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2007년에 한미 간에 합의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2012년 4월 17일에 전환하기로 양국이 합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윤상현 의원 양국 군의 합의사항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글쎄,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무엇보다도 2012년까지 모든 체제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여기에 사전에 합의한 조건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유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지속 주둔하고 또 미 증원군의 전개가 보장되고 또 우리의 부족한 전력은 미 측에서 계속 지원하며 연합대비태세와 억제력을 유지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저희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전구작전지휘시설, C4I체계, 연습체계, 이와 같은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과제로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첨단전력 도입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첨단전력 도입은 두 가지 사안이 통상 혼돈이 되는데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작권 전환과 국방개혁 2020 이 2개를 거의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2개의 사안이 지금 혼돈이 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소위 지휘권 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첨단전력의 문제는 국방개혁 2020에서 저희가 병력 위주의 양적인 군 구조에서 그것을 정보화·과학화된 질적 구조의 군 구조로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 첨단전력의 도입이 요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개의 사안은 조금은 서로 나누어져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후에도 WMD 제거와 강습상륙 등 2개의 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러면 CONPLAN 5029가 OPLAN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이것을 잠깐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전시에 대비하는 작전계획 5027, 현재 5027이고 저희가 2012년 이후에는 그것을 5012로 하는 걸로 지금 대략 합의하고 있는 그런 전시의 작전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평시에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계획 그것은 개념계획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5029입니다.

그래서 2개가 같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2개는 별도의, 하나는 전시를 위한 계획이고 하나는 평시 북한의 우발 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윤상현 의원 그러니까 5029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작전계획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현재는 저희가 아직 개념

계획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러면 1단계를 개념계획 단계로 보고 4단계를 작전계획의 확정 단계로 보면 1, 2, 3, 4단계 중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보면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은 1단계 개념계획의 단계를 넘어서서 조금 더 발전돼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알겠습니다.

2단계, 3단계 수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앞으로 계속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윤상현 의원 김정일의 조기 유고 등 북한의 급변사태는 불확실한 가정이라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현실입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 합참에서도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의 예상 탈북 인원에 대해 북한이 적극 억제할 경우에 10만 명, 통제력을 상실할 경우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탈북 경로도 해상과 지상은 물론 공중 탈북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이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 대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동의합니다.

○윤상현 의원 앞서 미군이 주도한다는 2개의 작전은 전황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작전입니다. 이들 작전의 시기와 결과에 따라 나머지 모든 작전들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 한국군의 전작권 수행이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작권 전환은 서로 지휘관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7년에 양국이 합의한 상태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현재와 버금갈 수 있는 체제로 할 것이냐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한미연합사 체제는 역사상 최고의 연합 체제 전력이라는 데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 전작권 전환 후에 한미연합사 해체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하나의 지휘관하에서 모든 지휘체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2012년 이후에 저희가 합의한 것은 2개의 사령부로서 운영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작전 체제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작전계획이나 예규나 이런 것도 다 하나로 발전시키기로 서로 합의를 했고 전구작전지휘시설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IT 능력을 발전시켜서 그것이 지금 비록 2개의 사령부라 하지만 계속적인 협조를 통해서 하나의 사령부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지금의 국방부를 보면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경우를 상상하는 것과 같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예비역은 거의 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런데 국방부 현역들은 그냥 가자고 합니다.

장관님, 군 선배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이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최선의 상황을 상상해서 저희는 그것에 대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최선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즉, 최선의 그것이 저희의 목표이지 그것을 저희가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만 그러나 저희가 최선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상현 의원 그러면 북한의 핵 무장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북한의 핵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에 대한 위협은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커졌지요?

북한의 오판 가능성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판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 한미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북한이 불시에 저강도 도발을 해놓고 '미안하다, 하급부대에서 한 것이다' 했을 때 핵을 가진 북한에다가 우리가 보복 타격을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어떠한 형태의 타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보복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뭐냐 하면 소규모의 도발에 대해서는 소규모에 대한 응징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그러면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작권 전환은 2개의 지휘체계의 변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분명히 제가 볼 때 약화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현재에 버금갈 만큼 충분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장관님, 제가 알기로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당장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작전계획 5027이 무효화됩니다. 그러면 미국 본토에서 65만 명의 증파병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또 2500여 대의 전투기가 오고 항공모함 5전단을 포함한 300여 척의 함정이 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총 가치가 1300조의 가치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지휘체계에서 누가 주도하느냐, 누가 지원하느냐 그런 것의 변화이고 한미간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전제조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유지하면서 또 주한미군이 지속 주둔하고 미 증원군의 전개가 보장되며 한국군의 부족한 전력은 미 측이 지속 지원하고 연합대비태세나 억제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는 그러한 전제조건하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작권 전환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위협상황을 제대로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맞춰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운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호등을 보고 빨간 불이면 스톱하라는 것입니다. 2012년 4월 17일이 약속날짜니까 빨간 불에도 신호 무시하고 질주한다? 그러다가 대형사고 날까 걱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날짜가 아니라 안보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핵 위협은 감소되기는 커녕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전작권 전환을 미뤄 주십시오.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당장 전작권 전환 문제를 거론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 그 시기는 좀 이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직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눈여겨보도록,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간에 우리가 재건팀을 보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근래 들어 아프간 전황이 개전 이래 가장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군에서 추가파병을 검토 중일 만큼 사정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재건팀 요원을 보호하고 부대를 경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경계병력 규모가 최소와 최대 얼마나 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현지실사를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 봄 경에도 한번 가서 확인을 한 것은 있습니다만 현재 계속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위협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러면 예상 주둔지역과 파병시기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나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지금 여러 군데가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중요한 것은 군의 대비태세입니다. 재건활동을 위해 기지 밖으로 넓은 지역을 이동하려면 장갑차량은 필수이고 무장헬기 지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사를 해 보고 어떠한 방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PRT 요원을 방호할 것인가 이런 문제 또 저희 부대 전체 방호까지 고려해서 방호대책과 그것에 필요한 무기체계 또 장비, 부대인원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중무장을 해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감사합니다.

○윤상현 의원 다음에 유명환 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2003년 4월 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보유를 시인한 지 6년 반이 지났습니다.

CVID라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러나 6자회담이 북한의 멀라인 컨페셔널 디플로머시(Malign Confessional Diplomacy), 즉 악의의 고백외교 전술에 이용당해 온 것은 인정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은 계속 협상을 지연시키면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상현 의원 김정일은 다자회담과 북·미 양자회담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는 핵을 가진 미국과 중국 혹은 러시아와 함께 핵 폐기가 아닌 핵군축을 논의함으로써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인받겠다는 계획이고 북·미 양자 간에는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평화조약 체결을 요구해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봅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의 그런 전술·전략 목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현 시점에서 어떤 회담의 타결은 돌발뉴스는 될지언정 의미는 없습니다. 북한은 의사표명, 약속, 합의, 선언 같은 것은 해 왔지만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외교의 특징인 기만성입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이었고 남은 것은 잘려진 살라미의 꼬리들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결과이지 합의문이 아닙니다. 이런 대북협상의 근본적 한계를 돌파할 방법에 대해 한미 외교당국이 고민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래서 지금 한미 간에는 물론이고 한미일 또 중국, 러시아와 같이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북한의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위 투 트랙 어프로치(two track approach)라고 그럽니다. 대화를 항상 제시하면서도 북한이 비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안보리 1874호에 의한 제재는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현재 북핵 문제는 과거 핵, 현재 핵 프로그램, 고농축우라늄, 미사일, WMD 확산 등 다섯 가지 주요의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영역이 이처럼 확대된 것은 북한이 WMD 프로그램을 그만큼 철저히 추진해 온 반면 국제사회의 억제전략은 철저히 실패해 왔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윤상현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 것입니까? 북핵 시나리오는 지난 16년간 항상 나쁜 쪽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두 차례의 핵실험이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지금도 나쁜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앞서의 다섯 가지 의제에 대한 타협, 즉 과거 핵은 용인하고 현재 핵 활동은 동결하며, 핵확산 봉쇄에만 집중하는 타협을 미국과 중국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랜드 바겐이라는 콘셉트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점차적인, 어려운 데서부터 쉬운 데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어려운 것부터 협상을 해 가지고 합의하자는 그런 취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핵확산 문제하고 비핵화하고의 분리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분리해서 해결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중국이 그랜드 바겐에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한중 간에도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대략적인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지난번 원자바오 총리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중뿐만 아니고 러시아, 일본, 미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지금 북한이 얻으려는 것은 핵무기 완성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즉 우라늄탄 개발, 플루토늄 생산능력 증대, ICBM 개발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라늄탄은 핵실험이 필요 없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신뢰성도 높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 HEU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대량살상무기를 대량으로 비축해 놓은 상태에서 북핵 의제를 더 추가하고 더 잘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계속 시간을 끌 수가 있습니다. 최근 느닷없이 남북 정상회담을 들쑤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현혹 당하면 북의 핵 잠재력만 더 키워주고 결국에는 협상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물론 남북 간에 대화를 통한 남북 화해협력을 해 나가야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여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의원님과 견해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이제 북핵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핵 완전폐기 요구시점을 통보하고, 그로부터 역산해 각 시기별로 유엔과 6자회담의 5개 국가와 대북 제재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북한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제재 로드맵을 논의해 구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 합의가 아닌 결과에 목표를 맞추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의원님의 생각을 충분히 참작해서 저희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공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강력한 대응카드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시간 끌기 전략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랜드 바겐 구상을 좀더 충실히 이행하도록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인택 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북핵의 완전 폐기는 대북정책의 최우선 목표입니다만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2월 이 자리에서 실효성 없는 과시용 지원 대신 북한 주민을 실제로 도와주는 지원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으로 자전거를 인도적 지원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북한 경제는 장마당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급제가 무너진 이후 장마당이 주민들의 생계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자전거는 운송수단이자 생계를 꾸려 가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 북한당국이 남성들의 장마당 장사를 사실상 금지시키면서 현재 장사를 하는 사람은 여성, 즉 주부가 대부분입니다. 남성과 미혼여성은 일이 있든 없든 무조건 정해진 직장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주부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고통을 떠안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여성들이 장마당으로 무거운 짐을 옮기려면 자전거가 필요합니다만 장관님, 북한에서는 여성이 자전거를 끌고 갈 수는 있어도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00년경에 북한 상부에서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지 말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자전거 탑승 금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자전거를 뺏기겠지요.

○윤상현 의원 벌금도 물고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벌금도 물고.

○윤상현 의원 그런데 그 조치가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는 실효성을 상실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평양에서는 비교적 잘 보안단속, 소위 이걸 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방에서는 그것이 느슨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장마당 장사에서 자전거는 없어

서는 안 될 필수품목이지만 워낙 고가인데다 공급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성들이 더욱 힘겨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대북 자전거 지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 또는 그 범주 내에 자전거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식량 문제 그리고 의약품 이런 매우 긴급한 구호의 성격을 띠는 것을 저희들이 인도적 지원에 넣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문제는 하여간 좀, 그런 필요성을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이 품질입니다. 현재 북한 내 자전거의 80% 이상이 일본산 중고 자전거라고 하는데 그 인기 비결은 고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Made in Korea가 어렵다면 우리 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관리해서 만든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필수 수리부속품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고요.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타는 레저용 자전거가 아니라 짐을 운반하기에 편리하고 비포장도로를 운행할 튼튼한 형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원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요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옥수수 1만t, 40억 원의 비용이면 수만 대의 자전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모형의 식량 지원과 경제활동을 위한 물적 수단의 지원은 그 결과가 다릅니다.

저는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플랜, 예를 들면 언제부터 월 단위로 어느 지역에 몇 대씩 지원하겠다는 플랜을 세워서 북측에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플랜을 마련해 보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현재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민간 차원에서 과거에 자전거를 북한에 보냈던 그런 사례들은 저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께서는 가난을 떨치고 일어선 1960~70년대의 대한민국 정치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현재 발전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그 시대의 중심에 있던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지 벌써 30년입니다.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꼭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또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찬양을 하자는 것도, 우상을 만들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인물 '박정희'를 기억하는 제대로 된 수단을 과연 가지고 있는지 자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만한 물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미시에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 관리 및 주변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KIST에서는, 다시 말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인 KIST에서는 설립자인 박정희 대통령 국제기념관을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정부는 국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저는 그간 미뤄져 온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에 정부가 적극 착수하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이 행정소송 등으로 해서 그동안 중단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박정희 기념사업회에서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새로운 상황 변화에 맞게 사업계획을 조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계획이 제출되는 대로 관련 기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정부가 예산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읽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 준공 목표 시점과 방법 등을 다시 다듬어서 조속한 시일 안에 발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사업회와 논의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공휴일은 국민의 기본적 휴식과 관련된 중요 사항입니다. 또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휴일은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적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법리에도 위배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경제계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의원 제가 지난해 그 제정법안을 제출하면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일하지만 오히려 노동의 생산성은 미국의 40%, 일본의 57% 수준입니다. 이제는 노동시간의 증감만을 따지는 도식적인 셈법을 버리고 재충전과 휴식이 주는 생산성의 향상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경기 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짧은 명절연휴로 인한 교통혼잡비용 등 사회적 손실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늦었지만 우리도 이를 시행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윤상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휴일 수를 조정하는 것은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총리님께서는 경제학을 워낙 공부하시고 경제학의 태두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춘절·노동절·국경절, 3대 명절의 내수에 1년 내수의 20% 이상을 씁니다. 그래서 내수 진작이 필요한 이 시기에 대체공휴일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노력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윤성 윤상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재경 의원님 소개로 해서 지역구인 경남 진주 을의 구민들께서 마흔 네 분이나 오셨는데 곧 정회합니다. 그냥 분위기만 알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본회의장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298명이 재적의원인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쉰 분 남짓 됩니다. 한 240명 의원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후부터도 생방송이, 생중계가 계속된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부의장 문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의원 전남 목포 출신 민주당 박지원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아드님 국적 회복하셨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신청 중입니다.

○박지원 의원 제가 지난 10월 22일 법부무 국정감사에서 아드님 국적 회복 관계를 물었더니 '과태료 150만 원을 안 내서 아직 안 됐습니다' …… 내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냈습니다.

○박지원 의원 이명박 대통령과 총리 임명 전에

독대하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독대를 하면서 세종시 수정하겠다, 4대강 반대 안 하겠다, 중도실용노선에 적극 공감한다는 등 세 가지 약속하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중에 세 번째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세종시나 4대강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의원 정정길 비서실장에게는 이회창 총리처럼 도중에 사표 내고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도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총리 임명 발표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운찬 총리를 대권 후보로 키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에 대통령께서 노발대발을 했고 이동관 홍보수석이 간신히 기사화를 막았습니다.

총리는 이런 발표 사실을 알았고 또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대권 후보로 키워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전혀 아닙니다. 저는 총리 일에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2대 국민 기만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서울 사수', 박정희 대통령의 '민정 이양' 발언입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이명박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세 번째 국민을 기만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총리는 스스로 소신 총리입니까, 예스 총리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 예스 총리는 아닙니다. 소신대로 일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글쎄요. 어제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저의 대답이 조금 미숙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소신대로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염려를 합니다. 미국에 갈 때마다 남북연락사무소, 5자회담, 그랜드 바겐 등 실현 불가능한 엉뚱한 제안을 해 놓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제적 망신을 당해도 정부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철학 없는 대북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참모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과거 정권에 비해서는 유연성은 좀 떨어진다고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추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금년 4월 중국 방문 시 시진핑 국가부주석 등 중국 고위 인사들과 면담을 통해서 '중국 인사들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중국의 고위당국자는 물론 실무자 등이 방북을 하고 북한 인사들을 초청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현재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부분적으로 그런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아니, 총리가 되어 가지고 중국 고위 인사가 북한 가고 중국 가는 것 모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금년 5월 클린턴 전 대통령과 서울에서 만찬회동 때 북·미 관계의 개선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과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고 클린턴 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국무장관의 대북정책이 김대중-클린턴 햇볕정책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금년 가을부터 북·미 간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예측은 정확히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북·미 간에 접촉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신문·방송을 좀 열심히 보십시오. 들으시고. 이제 보즈워스 특사가 평양을 방문합니다. 북·미는 직접 대화를 하고 결국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합니다.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 앞의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복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이것이 모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성과입니다. 총리께서도 2007년 4월 대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햇볕정책을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대북정책을 햇볕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 하고 건의할 용의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대전에 가서 발언할 때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햇볕정책이 긍정적인 면이 많다. 잘됐다. 그러나 투명성이 좀 부족한 것이 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는 대북정책을 지금 유연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유연한 자세를 취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세 가지 선결조건을 북측에 요구했습니다. 그중 신변 안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은 현대 현정은 회장의 방북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 해결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국장 때 특사 조문단으로 온 북한의 김양건 통전부장도 그 이상 강력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현대와 북측은 8월 17일 공동 보도문을 통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관광에 필요한 편의와 안전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도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담당관인 골드버그 조정관도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고 발표했고, 우리 정부에서도 북핵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는 연관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개성관광은 북한이 육로통행을 차단한 12·1 조치로 인해 중단됐지만 역시 8월 17일 공동 보도문에서 군사분계선 육로통행이 정상화되는 데 따라 개성관광은 곧 재개할 것이라고 합의했습니다.

북측은 8월 20일 육로통행을 정상화하고 남측이 요구하면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에는 9월 말 현재 우리 중소기업 114개 업체에 남측 1000명, 북측 4만 명의 노동자가 함께 일하고 있고 하루에 380여 명이 개성공단을 출입하고 있지만 별문제가 없습니다.

총리, 정부에서 금강산 개성관광을 위해 북측에 몇 번이나 대화를 제의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도대체 관광은 재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또 무슨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당연히 재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 여름에 금강산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규명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아직도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셨으면 조금 더 파악을 하십시오.

북측에서도 조속한 재개를 희망하면서 우리의 대화 제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주장하는 선결조건도 사실상 해결됐습니다.

남북관계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 같은 언어와 문화,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 풍부한 광물자원과 천혜의 관광자원까지 북한 경제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북한 경제를 지금 중국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투자국으로 작년 북한 총투자액의 90%를 점유하고, 특히 그중 70%가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 대외교역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북한 교역량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최근 원자바오 총리가 방북해서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나진항 개발 등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금강산 개성관광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제학자인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특히 북한 경제가 중국에 더욱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방면에서의 북·중 경제협력 관계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고칠 가능성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재개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노력해야지요. 그러나 실행을 해야 됩니다.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에 대해서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비밀접촉은 안 된다 하고, 통일부장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국정원장과 청와대는 시인했습니다. 국민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국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도 남북정상회담설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

씀드리기 힘듭니다.

○박지원 의원 그러면 국정원과 청와대는 아는데 총리와 장관은 모르면 내각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허수아비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분들도 안다고 시인하셨습니까?

○박지원 의원 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박지원 의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은 누가 언제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싱가포르 비밀접촉 사실은 누가 흘렸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모르쇠로 일관하면 국민이 실망합니다. 어제, 오늘 세계적 석학이라고, 서울대학교 총장이라고 그렇게 과잉 홍보된 총리의 그 답변 내용을 보고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 것을 잘 파악해 보십시오. 아는 게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서울대학교총장 했다고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설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직 제가 총리 된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박지원 의원 가장 중요한 게 남북 문제입니다.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은 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우리 정부는 아주 유연한 자세로 어디서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우리의 원칙만 맞으면 남북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비밀접촉을 반대하면서 지난 정권들이 비밀접촉을 하고 돈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 정부 10년간 쌓아온 남북관계의 공든 탑을 무너뜨린 이명박 정부에서 탑을 다시 세우려면 비밀접촉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난 정권에서 돈거래를 했다고 한 것은 거짓말입니다. 대북송금 특검과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정부 지원은 없었고 현대가 7대 사업 대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북한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어렵습니다. 쌀 생산량은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3배가 많습니다. 어렵고 못살고 배고픈 우리 형제가 북한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에도 인도적 지원은 제외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대북 쌀 지원은 우리 농민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쌀 재고량도 많고 금년 풍년으로 100만t이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썩어 가는 쌀을 두고 쌀 먹는 민족끼리 중국산 강냉이 1만t 가지고 생색내려고 해서 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도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국 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아직까지는 북한의 식량 사정 또 남북관계 상황 그리고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가되 기본적으로 남북한 간의 협의 기반 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그런데 대북 쌀 지원은 경협 차원에서 차관 베이스로 제공했던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슬며시 인도적 지원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한심합니다.

이산가족상봉을 신청한 사람은 9만여 명으로 70대 이상 고령자가 75%에 이릅니다. 그리움을 한으로 간직한 이 분들이 매일 10여 명 꼴로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지난 추석 때 이명박 정부에서 한 번 상봉했습니다. 언제 또 상봉 계획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빠른 시일 내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작년에 있던 사건에 대해서 진상 규명도 있어야 되고 재발방지 조치, 신변안전보장 대책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총리, 답변했으면 소신 총리면 지키세요. 써다 주니까 바꾸지 말고요.

국정원장은 인천항에 쌓여 있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물자를 전략 물자가 아니라면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천항에는 25개의 컨테이너 15억 원어치가 쌓여서 썩어 가고 보관료만 늘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 보낼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총리는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 사이에는 방북 승인이 친정부 성향의 단체는 승인해 주고 그렇지 못한 곳은 거부하고 있다고 원성이 많습니다. 경협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제인들의 방북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동대마방직, 삼성전자 등 위탁가공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기계설비를 보내 놓고도 기술자들이 방북을 못 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방북 승인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아무래도 남북관계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것을 떠나서 큰 기본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민간어선 NLL 월선, 임진강 방류 부실 보고, 북한선박 귀순 늑장대응, 민간인 철책 월북 등 4대 안보 사건이 바로 구멍 뚫린 이명박 정권 안보의 현주소입니다.

말로만 안보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모 신문기자에게 군 안보강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김 모 기자는 '대한민국은 노무현의 주적이었다. 그리하여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주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양서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하면서 '만악의 원인인 김대중을 처단하자.' 하는 내용의 극우 잡지를 군 간부 교육용으로 구독했습니다. 국가원수, 국군통수권자에게 현직 때는 충성하고 임기가 끝나면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이며 우리 국군의 안보관입니까? 잘된 일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국방장·차관이 싸우면서 내년도 국방 예산을 3.8% 증액한 약 30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병 봉급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시켰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계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사병 급식비만 하더라도 내년 1인당 5550원으로 약간, 한 100원을 늘렸습니다마는 복지시설, 급식비 7000원보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총리가 자식을 군대 보냈으면 사병의 봉급, 급식비, 이게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희 아들 군대 갔다 왔습니다.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대에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작년하고 올해가 금융·경제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회복이 되는 데 따라서 급식비나 또는 복지시설비 그리고 봉급도 올리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총리는 군대 안 갔다 왔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안 갔다 왔습니다.

○박지원 의원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미 관계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1874호는 중국의 무상 원조와 북·미 간의 대화 진전으로 이미 사문화되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홀로 대북제재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염려한다면 세종시는 원안대로 시행하고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비밀특사회담을 해서 정상회담을 하루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 김영삼 정권 때 제네바 협정처럼 왕따를 당하고 돈만 부담하는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변방에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참모들이 '그동안 역대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하자는 대로 했는데 변방의식 때문에 했다.'라고 비판하는데 남북관계를 묶어 두면 북핵문제, 평화체제 협의 과정에서 진짜 변방으로 밀려납니다.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도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박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길 의원 소개로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대 여성커리어개발센터 학생 서른여섯 분, 정옥임 의원 소개로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학생 다섯 분, 숙명여대 평생교육원 학생 스무 분, 그리고 박선영 의원 소개로 국군포로 및 납북자 가족 일곱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정옥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입니다.

새삼 대한민국의 저력을 확인한 지난 1년이었습니다. 아직 더 가야 할 길이 남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로 찬사를 받고 있

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담을 유치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흥 리더로 부상을 했습니다.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는 신아시아 외교를 통해서 한층 높아진 위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숱한 난관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퍼주고 뺨맞는 과거의 남북관계에서 벗어나서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대화의 문을 두드리는 남북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도전과 응전'이란 단어가 정말 마음에 와 닿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쉼표가 없고 새로운 도전 앞에는 휴식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해서 앞에 놓인 도전을 헤쳐 나가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이룩한 이 소중한 결과마저도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의 각오는 어떠한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이 또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 그랜드 바겐이 원샷 딜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행을 하는 데에서는 물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鄭玉任 議員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두 차례나 했고 또 얼마 전에 플루토늄, 사용 후 핵원료를 완성했다, 재처리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북한에 7~12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다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이제는 과거처럼 동결이라든지 불능화라는 말장난이 아니라 핵 폐기를 위해서 그야말로 북한과 대협상을 하자는 것이 그랜드 바겐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과 핵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한 지 거의 20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또 6자회담이 시작된 지 6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북한이 두 번에 걸친 핵실험을 했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종래의 방법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어려운, 핵물질·핵무기부터 다루자는 게 그랜드 바겐의 초점입니다.

○鄭玉任 議員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자면, 북한이 영변의 냉각탑을 폭파한 것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재작년입니다.

○鄭玉任 議員 그다음에 북한의 요청에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것도 재작년입니다.

○鄭玉任 議員 재작년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鄭玉任 議員 작년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 작년인가요? 시간이 하도 빨리 가 가지고요.

○鄭玉任 議員 지금 정답을 못 맞추셨습니다. 둘 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1년도 안 됐는데 그새 핵실험 했고요. 폐연료봉 전부 재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렇기 때문이 이명박 정부가 대협상을 하자. 핵 폐기를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급부를 주더라도 대협상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랜드 바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1993년에 이 그랜드 바겐과 비슷한 개념으로 패키지 딜로 하자, 북한 핵 문제 해결.

이것 누가 먼저 말한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패키지 딜은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鄭玉任 議員 장관,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1993년에 북핵 문제 일괄 타결로 하자. 패키지 딜로 하자라고 먼저 제의한 쪽은 미국도 한국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이제 기억이 좀 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다음에 바로 그 해에 그럼 포괄적 해결로 하자고 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한미 간에 협의해서……

○鄭玉任 議員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커트 캠벨 동아태차관보가 포괄적 패키지라는 용어도 사용했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컴프리헨시브 패키지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거는 아마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비핵화를 통한 점진적 관계 개선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단계별 접근 방식을 지속하기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사태가 급박하다. 북한의 핵무장을 조속히 막아야 된다.” 이거 읽어 보셨습니까, 이 글을 누가 썼는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누가 쓰신 글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항상 우리의 기본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鄭玉任 議員 아, 이게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김대중 대통령께서 마지막 미발표 연설문 내용으로 쓰신 글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론도 역시 일괄 타결, 포괄 타결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괄 타결, 포괄 타결이나 또 애초에 북한에서 제의한 일괄 타결이나 다 같은 내용인데 왜 그렇게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이 야당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한미관계 공조를 강조하신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鄭玉任 議員 우물 안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세계 국가로 나가자 하는 것이 외교부 홈페이지에 나타난 캐치프레이즈죠, 성숙한 세계 국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鄭玉任 議員 우리나라가 잘사는 나라 22개 나라 중에서 지금 어려운 나라를 돕는 순위가 몇 등인지 혹시 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매우 낮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맨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잘사는 22개 나라 중에서 22등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한국에 오셔 가지고 대외개발 원조라든지 평화유지활동을 독려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이라크 전쟁 기억하시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鄭玉任 議員 이라크 전쟁하고 아프간 전쟁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아프간 전쟁은 유엔 안보리가 2001년도 만장일치로 결의를 통해서 한 것이고 이라크와의 전쟁은 미국이 관계국들과 협의에 의해서 한, 유엔의 안보리 결의가 있었던가 없었던가가 큰 차이가 납니다.

○鄭玉任 議員 아프간 전쟁은 유엔 주도하에 만장일치의 결의로 국제적인 대테러전의 일환으로 많은 나라들이 참석한 것이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여기에 지금 군 작전이 시행되고 있고 많은 나라가 파병을 하고 있는데 NATO 국가들만 파병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NATO 국가가 아닌 나라도 많이 파병을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민간지방재건지원팀(PRT)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PRT 소개 좀 해 주시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지방재건팀을 강조하는 것은 아프간 사태가 전투로만 가지고는, 탈레반 소탕만 가지고는 평화 안정이 이룩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지방 재건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파병이라고 자꾸 하니까,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건 싸움을 하기 위한 파병이 아니고 우리 민간재건팀의 활동을 보호하고 경비하기 위한 그런 순수한 방어 목적입니다.

○鄭玉任 議員 우리가 파병을 한다면 그것은 민간인들로 구성된 민간지방재건지원팀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병한다는 말씀이시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우리가 전투병 파병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미국은 자기네가, 전투는 미국이나 NATO 군이 전담할 테니까 우방국들은 민간 지방 재건을 좀 도와 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鄭玉任 議員 NATO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 중에도 전투병을 포함해서 파병한 나라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나라가 지금 파병하고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을 비롯해서 또 콜롬비아, 여러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아프간의 PRT 지도를 보면 동북부 쪽이 상당히……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게 아프간 지도입니다. 보면 녹색 선이 있고 파란 선이 있고 빨간 선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건 치안상황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빨간 쪽이 가장 좀 치안상황이……

○鄭玉任 議員 지도의 색깔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선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지요? 녹색 줄……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도로……

○鄭玉任 議員 예, 도로건설 상황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도로건설 상황이고……

○鄭玉任 議員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중에서 우리 삼환기업이 공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저 선이 제가 알기로는 전부 우리나라 기업이, 녹색은 완공한 것이고 파란 것은 지금 현재 건설 중이고 빨간 것은 예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맞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 PRT도 다른 나라만큼 보내지 않았고 또 PRT를 보호하기 위한 파병도 하지 않았지만 기업들은 열심히 가서 지금 저런 활동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러면 기업의 보호 차원에서도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저희들은 하여튼 아프간의 지방 재건을 돕기 위해서 민간요원을 파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을 보낸다는 그런……

○鄭玉任 議員 이 아프간 쟁점하고 또 거의 유사하게 심각한 쟁점이 바로 한미 FTA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미 FTA 당시에 수석대표를 했던 웬디 커틀러 무역대표부 대표보의 발언이 지금 화면에 뜨고 있습니다.

보면 2007년에 말한 것은 아주 단호하게 "이 FTA가 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원문을 수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다가 다시 "패키지 권고안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뉘앙스가 바뀝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말을 지금 바꾸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한미 FTA의 기본철학은 어느 한쪽이 유리하고 어느 한쪽이 불리한 게 아니고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국 공히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 저러한 뉘앙스의 차이는 아마 정권의 교체와 더불어서 불가피한 그런 입장의 수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가정법적으로 미국 정부가 '재협상하자.' 그러면 한국은 '절대 재협상은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인데 앞으로도 그런 것입니까? 여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재협상을 한다면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집어넣어서 다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FTA는 양측의 이익이 균형되게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한다고 그러면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도 그것은 원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오바마 대통령이 언제 방한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11월 18일 아마……

○鄭玉任 議員 그 방한을 앞두고 미국의 백악관에서 최고위층들 간에 한미 FTA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한미 FTA 불씨가 살아났는데 바로 오바마의 최측근으로 파워 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이 제동을 걸고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미 FTA는 단순한 경제적인 어떤 무역에만 문제가 아니

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21세기 전략동맹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도 미 측에 강요를 하고 있고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도 상당한 수준의 이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미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의 통상이익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의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의 경제 미래와 관계가 있는 이 무역 쟁점과 관련해서는 혹여라도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질질 끌려가지 마십시오. 줏대를 가지되 유연하게 FTA 추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鄭玉任 議員 들어가시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鄭玉任 議員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난 7월에요, 사이버 대란이 있었지요, DDoS 공격이라고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鄭玉任 議員 그런데 이 DDoS 공격이 북한의 체신성이 다른 나라의 IP를 임대해서 사용했다라는 보도가 신문에 나왔었는데 읽어 보셨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읽어 봤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뿐만이 아닙니다.

군 인트라넷을 사용하던 장교 1명이 부주의로 인증서를 유출시키는 바람에 화학물질사고대응시스템(CARIS)이라고 하지요, 이것이 해킹당했다, 이게 해킹당했다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화학물질저장시설이라든지 중요한 화학물질시설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 정보가 다 누출됐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맞습니다.

○鄭玉任 議員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심각합니다.

○鄭玉任 議員 이 화학물질사고대응시스템의 유출 배후에도 북한이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있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도 그것을 의심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추적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鄭玉任 議員 바로 지금 말씀드린 CARIS 해킹도 그렇고 또 DDoS 공격도 그렇고 지금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의 내용이 점차 상당히 무서워지고 있고 상당히 21세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면서 가장 불안한 것이 우리 지금 북한과의 대응에 있어서 전술통제라고 하는 것, 즉 C4ISR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군 내부에서 인트라넷도 쓰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부터, 북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안전합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선 인트라넷과 인터넷의 차이는 지금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필요한 보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인트라넷을 통해서 군 내부에서만, 다른 바깥하고는 단절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은 밖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침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저희 군에 있는 군 소속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령 USB나 이런 것을 잘못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런 정보가 유출되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자체 단속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상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에도 저희가 일부 유지를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원래 이런 비밀사안을 실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간부들이 실수로 하고, 그것 때문에 CARIS와 같은 사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본 의원이 인터넷과 인트라넷의 차이를 몰라서 질문을 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바로 그런 혼용의 과정에서 분명히 해킹이라든지 사이버 공격의 여지,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있을 수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뿐만이 아니지요.

지금 북한의 공격 또는 첩보원들이 첨단 장비를 사용을 해 가지고 다양한 첩보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건 북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모라는 고정간첩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간첩이 GPS 장비를 사용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군사기지를 포함해서 34개의 좌표값을 북한에 넘겼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알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상당히 지금 심각하고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10명이 넘는 북한 주민이 아무 제재도 없이 귀순을 했고 또 연안호가 월선하는가 하면 강동림이라는 대한민국의 민간인이 월북을 하는 상황에서 군이 아무 대비 또는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안보의 기둥인 군의 기강 해이 또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지금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우려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우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안들 모두가 전혀 저희가 대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다 대비했습니다마는, 그 대비 자체가 완벽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국민 모두, 어떤 분들께나 저희가 할 말이 없고 이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鄭玉任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의 쌀이 썩어 가는데 동포인 북한에게 왜 전달해 주지 못했냐는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鄭玉任 議員 통일부에서 인도적 지원의 일환으로 옥수수 1만t을 보내 주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추진을 하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런데 북한에서 무슨 답변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뭐 그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鄭玉任 議員 아직 아무 답변도 없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닙니다. 하여간 북한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또 '보내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남북한 관계라는 게 하루 만에 '예스' 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시간이 꽤 걸렸는데, '필요하다, 좀 달라' 그래서 '보내겠다, 옥수수 1만t 보내겠다' 하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응답 없는 것은 분명하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저희들이 그것은 추진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본 의원이 추측하기로는 지난 정부 때는 삼사십만t씩 쌀을 보내 주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그런데 좀 적은 것 아니냐라는 불만의 표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지요, 이 옥수수와 관련해서 올해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했습니다. 또 핵실험도 했지요. 미사일 발사 시험과 핵실험을 한 비용을 합치면 북한의 200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옥수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 점도 알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옥수수 1만t이 적다고 하시는데 그게 1t 트럭의 1만 대분입니다. 그래도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이고요,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제가 적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요, 북한이 적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아니냐, 옥수수 1만t이 40억 원이나 됩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鄭玉任 議員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총리 나오십시오.

총리 되신 지 얼마 되시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라는 사실은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어제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 만나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鄭玉任 議員 사실 당시에 독일이 통일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콜 수상을 비롯해서 독일의 지도부는 '역사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리고 실낱같은 기회를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제 슈뢰더 총리와 독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통일 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나누었지만 통일 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헬무트 슈미트 수상을 만났습니다. 어떤 한국 사람이 '한국 통일 언제 됩니까?' 그랬더니 슈미트 수상 말씀이 '통일을 하고 싶으면 통일 준비를 속으로나 하고 말로 통일 얘기하지 말라, 독일도 겉으로는 통일 얘기 안 했으나 속으로 준비하다 결국 통일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鄭玉任 議員 사실 그래서 독일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참고할 하나의 사례인데, 어제 슈뢰더 총리하고 통일 독일의 수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鄭玉任 議員 지금 수도가 베를린과 본으로 갈려 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습니다.

○鄭玉任 議員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국무총리 정운찬 수도를 베를린에만 두고 모든 행정부처를 거기다 두기는 안 됐어서 본에 좀 남겨 놨는데 앞으로 10년 후면 본의 행정부처는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鄭玉任 議員 독일이 베를린과 본으로 수도가 나뉘면서 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부처는 베를린에 차관 1명을 더 두고 있는 거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차관뿐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이 본에 상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鄭玉任 議員 셔틀 비행기 1년에 5500회 다니는 거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정확한 횟수는 잊어 버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鄭玉任 議員 세종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공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세종시에 대한 수정이 곧 세종시에 대한 축소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절대 축소는 없습니다. 면적도 축소가 없고 예산도 축소가 없습니다. 예산은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玉任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고맙습니다.

○鄭玉任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앞에 중국의 부상 또 미국의 침체, 에너지 안보 등 많은 과제와 도전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여전히 개방을 거부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과 후계 문제로 변화의 조짐은 감지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북한 정권도 어떤 방식으로든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통일시대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직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뿐이라는 엄중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숙연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감내하기 힘든 역사의 파고 속에서도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라는 큰 역사를 이룩했습니다.

정치적 복선이 들어 있는 잘못된 데모정치 때문에 무익한 논쟁에 휘말리거나 또는 아직 안보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가 해이해져서는 도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면서 정치가였던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J. Kenneth Galbraith)는 '정치는 하기 싫은 것과 비참한 것 사이의 선택'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는 국가의 미래와 백년대계를 위해서 비참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것을 할 줄 아는 용기를 발휘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정옥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소개로 부산 영도구 지역구민 서른두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박선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세요.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드시지요? 살도 좀 빠지신 것 같네요.

○국무총리 정운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애주가로 알고 있습니다. ‘원샷’이 무슨 뜻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원샷이요?

○박선영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

진담으로 하시는 겁니까?

○박선영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진담으로 하시는 겁니까?

○박선영 의원 진담이지요. 국민 앞에서 농담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그저 술 마실 때 원샷밖에 모릅니다.

○박선영 의원 ‘원샷 딜’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한 번에 다 하자는 말씀이지요.

○박선영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한 번에 일괄해서 하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박선영 의원 그게 외교용어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글쎄, 제가 외교를 잘은 모르지만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선영 의원 적당하지 않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박선영 의원 그랜드 바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의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헤아리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 들을 때 미국하고 뭘 그렇게 바겐세일하려고 그러나, 뭘 그렇게 땡처리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그랜드 바겐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국무총리 정운찬 종전에는 남북 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임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랜드 바겐은 지금 북한에서 핵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북한으로 하여금 비가역적…… 핵문제를 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자 중의 5개 나라가 앞으로 비가역적 비핵, 그다음에 상호 인정, 그다음에 경제협력, 이런 것들을 내걸고 북한과의 협상전략을 세운 후에 북한을 만나서 일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단지 지금 협약은 한 번에 하는 것이지만 행동은 한 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을 두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그러면 일괄타결하고 같은 말이네요?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정확한 번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 가지, 비가역적 비핵, 그다음에 상호 인정, 그다음에 경제협력을 한꺼번에 해결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행동은 시간을 좀 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그러니까 내용은 일괄타결하고 같은 것이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약속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박선영 의원 그런데 1994년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일괄타결하자고 주장했다가, 그 당시의 야당이 누구인지는 아시겠지요? 지금의 한나라당이 엄청나게 반발해서 없던 걸로 취소했던 외교 용어입니다. 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들었습니다.

○박선영 의원 게다가 그랜드 바겐은 이미 미국 싱크탱크에서 썼던, 10년 전에 썼던 용도 폐기된 용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왜 썼을까요?

○국무총리 정운찬 제가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듣기는 미국에서 나온 포괄적 패키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컴프리헨시브 패키지(comprehensive package)라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박선영 의원 예, 컴프리헨시브 패키지, 포괄적.

○국무총리 정운찬 예,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워싱턴으로 방문하셨을 때 그 의미로 말씀하시면서 ‘그랜드 바겐’ 하셨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해 가지고서 널리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박선영 의원 뉴욕타임스의 9월 21일자 보도를 알고 계시면서도 그런 말씀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9월 21일자 보도는 못 봤습니다.

○박선영 의원 거기에 뭐라고 썼냐 하면 ‘이 씨

의 제안으로 미국은 놀라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썼습니다. 그 이 씨가 누구일까요?

○국무총리 정운찬 이명박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박선영 의원 9월 21일자 뉴욕타임스지요. 'Mr. Lee's proposal caught the United States by surprise'라고 썼습니다. 그것 처음 들으시는 말씀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신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박선영 의원 우리 정부가요, 미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비판적인 기사는 전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자화자찬에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지금 총리도 그것을 모르시는 겁니다.

대통령이 깜짝 쇼 하러 미국에 갔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박, 의원님!

○박선영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뉴욕타임스가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간의 대화를 전부 알고 할 수도 있고 모르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을, 그랜드 바겐 아이디어에 대해서 미국 관리들이 출장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당시에 그 아이디어가 미국 관리들한테 잘 스며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총리를 하시려면, 그리고 오늘 외교·안보·국방에 관한 답변을 하시려면 팩트 파인딩(fact-finding)을 좀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요, 외교협회에서 그 발언을 하기 전에 뉴욕타임스하고 무려 1시간에 걸쳐서 독대를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박선영 의원 그런 것도 모르고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준비를 좀 하고 나오십시오.

자, 뉴욕타임스가 일국의 대통령을……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제 말씀은요, 이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 간의 대화 중에 과거 똑같은,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을 말씀했더니 그랜드 바겐이 참 좋다고 말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선영 의원 그러게요, 잘못 듣고 계십니다.

세종시에 대해서도 잘못 입력이 돼 있으시고 이런 외교적인 망신과 외교적인 결례도 잘못 알고 계세요. 그런 것은 전혀 알고 계시지 않으시지요.

일국의 대통령을 'Mr. Lee', '이 씨'라고 지칭하는 미국 언론도 문제지만 상대국하고 사전에 아무런 조율도 하지 않고 미국에 가서 벌컥 이 용도 폐기된 단어를 사용하는 우리 정부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해외 국감을 가서 주미대사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주미대사 왈 '그런 것은 서울에서 외교부가 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그다음에 하는 말이 '뉴욕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워싱턴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답변을 합디다. 우리 총리께서는 ……

자, 총리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2기 총리지만 대한민국의 총리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의원 행정부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성이 있고 자기구속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어질러 놓은, 엎어 놓은 이런 외교적 결례·망신·엇박자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상황을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상황을 잘 파악해서 지난번 내각하고 이번 내각 간에 계속성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계속성이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그런데 세종시는 왜 계속성이 없나요?

자, 대통령도 시장 할 때 양심 다르고 대통령 후보 됐을 때 양심 다르고 지금 대통령 되고 난 뒤의 양심이 다릅니다.

대통령은 총리 뒤에 숨어 있고요, 총리는 지금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9월 3일에 지명 받으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의원 이것 일어난 것은 9월 21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무 사실 파악을 못 하십니다.

정 총리의 머릿속에는 세종시밖에 아무 것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총리는 세종시 총리가 아니

라 대한민국의 총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부를 통할해야 될 총리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이 지명받고 난 뒤에 일어났던 이런 외교적 엇박자도 모르고 앞으로 상황 파악을 이제부터 하시겠다고 합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저는 9월 29일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박선영 의원 임명은 받았지만 9월 3일 날 지명을 받으셨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박선영 의원 그래서 그날로 기자들이 가서 물었을 때 세종시는 수정돼야 된다고 야심 차게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셨습니다.

아니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직 총리 되기 전에 자유로운 경제학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선영 의원 책임 있는 자의 말씀이었습니까? 이 정부에는 양심은커녕 영혼도 없습니다. 편할 때마다 두 쪽 세 쪽 나는 불량한 양심밖에 없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후회……

○박선영 의원 세종시 외에는 어떤 발언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총리는 지금.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월 3일 날 말씀드린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자꾸 의원님들이 '왜 이전에는 세종시 발언을 안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제 생각이 굳어지지 않아서 그랬고 거기다가 굳어지지 않은 생각을 제 출생지인 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박선영 의원 총리 되시고 한 달, 총리 지명받으시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외교·안보·국방에 대해서 언급하신 게 있습니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없으시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총리를 '세종시 총알받이 총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랜드 바겐이 아니라 이 정부는 그랜드 에러를 내는 외교만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했다고 했고 한중일 협력체제를 궤도에 올렸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또 한중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영 의원 대통령이 제시한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반응 보였는지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미국 외에 다른 6자회담의 당사국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미국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미국은……

○박선영 의원 미국 외에요.

○국무총리 정운찬 뉴욕타임스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중국하고 일본 간에는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한중일 3국 정상이 공동기자회견 하면서 일언반구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공감대를 형성한 것하고 마지막 결론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의한다면 당연히 정상회담 후에 하는 기자회견 그리고 그 선언문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영 의원 그러면 아직도 진행형이지요. 자화자찬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의원님, 하토야마 총리가 취임 후 첫 방문국이 한국이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선영 의원 제가 6자회담의 당사국들이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울을 왔다는 것 자체가 그게 그랜드 바겐을 인정하는 행위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마지막까지 안 갔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영 의원 지금요, 6자회담 당사국들은 겉으로는 한반도 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다른 생각, 철저하게 계산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상이몽 정도가 아니라 동상육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을 위한 이벤트성 외교밖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대국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굴욕 외교를 해서도 안 되고 약소국 앞에서 한없이 거만하게

구는 오만한 외교를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통 큰 결단을 생각하고 있다면서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외교 또는 외교 성과를 너무 그렇게 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아니, 북한이 지금 통 큰 결단 생각하고 있다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입니까? 온 신문에 다 났는데요, 방송에도 나고요.

○국무총리 정운찬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박선영 의원 아니, 통 큰 결단을 북한이 하려고 한다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를 지금 제가 여쭤봅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오로지 총리의 머릿속에는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남북정상회담 하려고 뒤에서, 밀실에서 비선으로 하다가 지금 들통이 나서 덜커덕거리지요?

지금 남북회담 해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국군포로 한 분 모셔 오지 못하면서, 납북자 문제 또한 입도 뻥끗 못 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도외시하면서 또다시 북한에 퍼 줄 생각하십니까?

영혼이 없는 외교, 삐걱거리는 한미 공조, 두 쪽 세 쪽으로 갈라져 버린 줄도 모르고 양심 운운하는 양심 없는 정부, 자화자찬에 도취되어 있는 대통령을 보면서 박수 칠 사람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사진 한 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누군지 아시겠지요? 중국 공안에 잡혀 있는 국군포로 정모 할아버지입니다.

다리 보십시오. 전쟁의 후유증으로 다리 정상 아니십니다. 눈 보십시오. 총알 때문에 눈이 이렇습니다. 탈북한 후에 바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미 평균 수명이 지나 버린 분입니다.

지금 어디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북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북경 어디요?

○국무총리 정운찬 공안 당국에 있지 않겠습니까?

○박선영 의원 예, 지금 아무도 접근 못 하는 안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가가 아니라 중국 당국의 안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국군포로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수백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수백 명이요?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잘못된 수치로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6~7%밖에 안 된다고 국민 호도하시면서 경제학자가 지금 숫자는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다른 숫자는 하나도 모르세요.

560분입니다. 납북자는요?

○국무총리 정운찬 알겠습니다, 예.

○박선영 의원 전시 납북자는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박선영 의원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시지요?

지금 저 방청석에요, 2004년도 12월에 국군포로로 탈북했다가 다시 북송이 된 한만택 씨의 조카며느리 나와 계십니다. 2006년 10월에 국군포로 가족 9명이 북송됐습니다. 우리 정부 몰랐습니다. 그 가족의 가족들도 나와 계십니다.

총리, 저 분들을 뵐 면목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면목이 없습니다.

○박선영 의원 지난 정권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한마디도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권 똑같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저희가 그 사실을 알고 중국 당국에 그분, 정 선생님을 한국으로 송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선영 의원 노력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만날 공문서 보낸다면서요, 하루에 한 번씩? 공문서 그렇게 보낸다고 중국이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상황이 허락하는 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소모적인 세종시 원안 수정론 개발하느라고 밤잠 설치지 마시고요, 환경 파괴적인 4대강 죽이기 하지 마시고 그런 데 쏟을 정성과 에너지, 돈의 10분의 1이라도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위해서 좀 지혜를 모아 보십시오.

대통령실 직속으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특별대책위원회, 제가 지난 9월에 세미나 하면서 촉구했습니다.

설치할 의향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국군포로, 돈을 주고라도 모셔 와야 된다고 제가 이 세미나 하기 전부터 주장했습니다. 요즘 그 프라이카우프(Freikauf)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 원조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제발 좀 하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마루타가 무슨 뜻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박선영 의원 그러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 하나 같이 보시겠어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박선영 의원 저분은요, 제가 지난달에 해외국감 갔을 때 아르헨티나에서 만난 인민군 포로십니다. 여든 여섯입니다.

저분은요, 유엔군에 인민군 포로가 되었을 때 송환시켜 준다 그러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북한에는 갈 수가 없고 아무 연고가 없는 남한에도 갈 수가 없으니 나를 한반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땅으로 보내 달라"고 해서 유엔군이 아르헨티나로 모시고 갔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

○박선영 의원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송환시킬 아이디어가 총리님 머릿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모셔 와야 합니다.

○박선영 의원 어떻게요? 로드맵을 말씀해 주세요. 총리 되신 지 한 달 만에 세종시는 로드맵 발표하셨데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지만?

○국무총리 정운찬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마루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무슨 뜻인데요?

○국무총리 정운찬 전쟁과 관련된 포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만족스러울 생각……

○박선영 의원 전쟁 포로가 아닙니다.

731부대는 뭐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항일독립군인가요?

○박선영 의원 히로히토 천황의 칙령으로 설립한 유일한 부대입니다. 그리고 천황의 막내 동생이 장교로 복무했던 부대가 바로 731부대이고 생체실험을 했던 부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읽은 적이……

○박선영 의원 제가 지난달이 안중근 의사 거사 100년 기념으로 하얼빈에서 열린 세미나에 주제발표자로 가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수집했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일본군은 퇴각하면서 731부대를 다 폭파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문서는 다 불 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치 않았습니다. 이 불타던 문서가 유독 조선인에 관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고창률이라는 이름이 있고 김성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1941년 고창률 선생은 일본군 정보를 수집했고 그 뒤에 비밀활동이 탄로나서 대피하던 중에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었습니다.

일본군은 그 분에 대해서 소련의 명령을 받고 활동경비로 백수십만 원을 타서 만주 일대를 다니며 간첩 활동을 자행했는데 살려둬 봤자 역첩보활동을 할 가치도 없으니까 731부대로 특별이송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한 사진도 딱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저쪽의 화면으로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이 좀 불명확하지만 정면사진과 측면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소련의 명령을 받은 소련의 첩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첩자일까요?

(책을 들어보이며)

저는 지난 7월 1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그쪽의 극동대학교하고 '발해, 고려인, 그리고 연해주'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하면서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전신인 대한국민의회가 그쪽에 있었고, 연해주에 있었고 안중근 의사도 거사 3일 전까지 그곳에서 권총을 구입해서 사격 연습을 하셨던 곳이 바로 연해주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소련입니다.

일본군은 독립운동가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항일독립군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일독립군들을 전부 소련의 첩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분들의 주소는 대부분이 함경북도입니다.

이분들이 731부대에서 어떤 생체실험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어렴풋하게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박선영 의원 이 자리에서 그 잔혹했던 생체실험, 우리 독립투사들에 대해서 가해졌던 생체실험을 입에 올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박선영 의원 세계는 독일의 유대인 학살 책임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법정에 세웁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동의합니다.

○박선영 의원 그렇다면 일본에게 사죄를 요구하고 보상 받아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한일 간의 과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영 의원 아우슈비츠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전 세계 곳곳을 뒤지면서 잡아내서 법정에 세우는 게 정의라고 하시면서 한일 역사 관계를 뒤집어 봐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제 말씀은 한일회담이 60년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회담 내용을 잘 알아야 정확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검토총리 하지 마십시오.

내년이 경술국치 100년입니다. 일본에게 이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정의의 길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생체실험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균무기 개발 등으로 인한 인권유린 만행을 개선할 수 있는 그야말로 차도지계(借刀之計)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이제이(以夷制夷)입니다.

충청도 총리를 앞세워서 세종시 문제를 엎어버리는 것보다도 더 근사한 차도지계입니다, 이이제이입니다.

역사의식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총리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픕니다.

자원외교도 번번이 중국한테 당하고 요상한 외교용어 남발하다가 주변국한테 망신만 당하고 두 번 세 번 북한이 물을 쏟아 부어도 국민에게 제대로 경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애먼 민간인들을 북한의 살수대첩에 희생양으로 바치고 철책이 뚫린 것도 모르고 있다가 조선인민방송이 구체적으로 장소와 방법, 인적사항까지 마치도 조롱하듯이 알려준 뒤에야 부랴부랴 확인하는 얼빠진 국토방위 현장, 목선을 타고 북한 주민 11명이 영해로 들어와도 모르는 국군, 도대체 이 정부는 오로지 세종시 외에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이 없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당하는 것은 최첨단 무기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악한 사제폭탄에 당하는 겁니다.

정신이 문제입니다. 영혼이 문제입니다. 얼빠진 사람, 영혼이 없는 정부에게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역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자행되는 외교, 영혼이 없는 외교,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여론몰이에만 급급한 정부,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애써 외면하는 정부, 입으로만 친서민·친환경을 외치는 정부, 청산되지 않은 역사에 눈감는 정부, 비인도적 범죄에 침묵하고 무관심한 정부, 소통의 창은 막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철책에는 커다란 구멍을 뚫는 정부, 필요할 때마다 팔색조처럼 변하는 양심 운운하면서 국론을 분열하고 또 다시 지난 정권처럼 국민을 속여 가면서 밀실에서 비선을 동원해서 남북정상회담이나 하려고 획책하는 정부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자로서 대정부 견제에 여당도 좀더 강하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문희상 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문학진 의원 소개로 경기도 하남시 및 광주시 지역 주민 예순 여섯 분이 와 계십니다.

다음은 김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 연천 출신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보와 경제의 상생을 위해 국방뉴딜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보호를 위한 국방 규제의 전면적인 개혁, 둘째 방치된 군사시설과 군 유휴지의 효율적인 활용, 셋째 민·군 협력을 통한 안보와 경제의 상생이었습니다.

민과 군이 하나가 되고 안보와 경제가 상생하는 국방뉴딜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8일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8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서는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우 의원 들으셨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김영우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있는 이 자료가 바로 그날 확정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좀 아쉬운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국방뉴딜정책의 많은 부분이 수용되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지만 아쉬운 점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 먼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방안이 좀 빠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포공항 소음 문제로 1심 재판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패소한 사건, 기억하시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 이제 아마 앞으로는 정부가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수없이 제기될 그런 많은 소송에서 정부가 저는 패하리라고 봅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김영우 의원 이 점을 깊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장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민간인 사유지를 점유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약 698만 평에 이릅니다. 이것은 국방부가 추정하는 금액만으로도 2019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 군이 민간인 토지 소유자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징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약 187만 평에 달합니다. 가격으로 치면 756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상권 설정 계약서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군이 철원에 있는 한 주민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오다가 그 토지 소유자가 군에 보상,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는데 오히려 군은 강제로 그 주민과 지상권 설정 계약서를 맺었습니다.

이 계약서 2조1항을 보면 "지상권에 대한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항에 보면 지상권자, 국방부입니다. "지상권자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항을 보면 지상권 목적물에 대한 공과금, 세금이지요. 이 세금은 지상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군과 민간인 소유자가 맺은 엄청나게 불공정한 그런 계약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헌법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헌법 제23조를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항을 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우리 군의 이런 지상권 설정 계약서 같은 것은 헌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장관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에 군

이 죽 존재하는 가운데 그동안에 많은,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가 변해 온 과정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군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사안을 정확하게 시행을 하지 못하고 주민과의 그냥 협조나 또 무상사용 동의를 받는다든가 또는 지상권 설정이나 이런 편법을 이용해서 사용해 왔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제 연차적으로 저희가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우 의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마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저희가 국방위에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군 자체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국방개혁 2020에 의해서 그동안의 병력 위주의 군대에서 보다 과학화된 군대로 가면서 병력을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상군 부대가 감축이 되는데 그 감축이 되는 과정에서 부대를 이전하고 부대를 조정하다 보면 유휴지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휴지와 그런 훈련장의 통폐합을 통해 생기는 유휴지, 이런 것들을 매각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재원을 마련하고 또 일부는 저희 재정적인 재원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의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주장해 왔던 국방뉴딜정책의 핵심이 바로 군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지를 적절하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유휴지가 515만 평이고 또 미군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지는 350만 평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군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지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김영우 의원 다음은 사이버 보안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메일을 보면 해커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악성코드를 확산시키면서 비밀을 빼내 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메일만 얼핏 보면, 메일의 내용 제목이 '정보절취 목적 해킹메일 주의공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해킹 방지를 위한 안내 메일처럼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낸 사람의 이름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친숙한 사람들의 이름을 도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에는 악성코드 방지하는, 악성코드를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치 그런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첨부가 돼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열게 되면 바로 악성코드가 침투해 가지고 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내용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좀 교묘하지요.

이렇다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장병들에 대한, 특히 특수 부서에는, 여러 가지 비밀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부서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교육이 좀 이뤄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해킹기법은 계속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하면 또 그 대응책을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 저희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간부들한테 자기들이 알 수 없는,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이런 메일에 대해서는 일체 열어보지 않고 바로 그것은 삭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나 이런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이트에는 저희가 24시간 사이버 위협을 감시할 수 있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팀에서 이런 유사한 해킹정보가 있는 것이 떠오르게 되면 그러한 내용을 즉각 전파해서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현역뿐만 아니라 이런 군사 기밀을 다루었던 사람들이 전역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동기회를 만들고 이렇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그런데 이런 예비역들에 대해서 그 홈페이지라든지 이메일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모든 신상 정보가 해커들에 의해서 유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역들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역에 대한 대책이 좀 미진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왜냐하면 예비역을 저희가 강제로 통

제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예비역들에 저희가 교육과정에서라든가, 저희 현재 자체에서 예비역을 군에…… 예편된 다음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의 활동을 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짧은 코스의 교육과정 같은 것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 예비역들한테 배포하고 있는 국방일보라든가 또는 저희 자체 내에, 지금 국방 인터넷 같이 홈페이지에 그러한 사안을 저희가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걸 좀더 강화해서 예비역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우 의원 예,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가끔 언론에서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진짜가 아닌 김정일을 쏙 빼닮은 가짜다라는 이런 언론보도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저도 그 언론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 예, 그리고 지난 10월 26일 정부는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에 대해서 옥수수 1만t 또 분유 20t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김영우 의원 그런데 순수 민간인 지원이 아닌 정부의 지원은 적어도 국군포로 또 납북자 문제와 연계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부의 지원도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그런 것들하고 연결을 시키지 않고 계속한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김영우 의원 다음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싱가포르 비밀접촉, 그런데 비밀접촉이 아닙니다, 결국은. 비밀접촉을 했으면 이것이 끝까지 비밀이 유지됐어야 되는데 언론에 나오고 또 관계부처끼리 서로 명확치 않은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번의 사전 접촉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도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밀 접촉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 또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우 의원 아, 그 사전 접촉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없습니다.

○김영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는 비밀 접촉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활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접촉해서 충분히 속내를 드러내 놔야 그 결실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접촉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런 사전 접촉이 이루어질 경우라면 그것이 상당히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된 그런 접촉이어야 된다, 이번 경우처럼 이렇게 언론에 흘러나오고 또 무성한 그런 소문만 있는 이런 사전 접촉은 우리 정책에 굉장히 혼선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또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도 '원칙 없는 만남이라든지 만남을 위한 만남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남북정상회담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마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어떤 국민적인 큰 합의가 있는 바탕하에서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됐든 하여간 남북대화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우 의원 만약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는 평양에서 열리게 되는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그런 가정적 질문을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우리가 북핵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그런 논의가 되는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했을 때 장소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마 장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전제가 되어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의원 일설에는 개성 정도면 우리 정부가 좀 받아들일 만하지 않느냐, 그런데 평양이라고 했을 때는 지난번 남북정상회담 때 다음 정상회담은 답방 형식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다시 평양에서 열린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우리 정부의 떳떳함이나 당당함에 비춰봤을 때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세간에 여러 가지, 장소 문제에 대해서 또 이번 언론에 나오고 있어서 아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주에 아프간 파병 방침을 공식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우 의원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리의 민간 재건팀을 보호할 목적으로 경계 병력을 파병한다고 하지만 사실 경계 근무를 서다 보면 테러 집단과의 교전, 전투 이런 것이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위협을 받을 경우에 자체 방어를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 때에 따라서는 응전과 확전까지도, 물론 부분적인 확전이겠습니다마는, 감수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확전이라는 개념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위를 위한, 자위를 위한 수단으로 제한할 생각입니다.

○김영우 의원 분명한 것은 교전, 전투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현지 교민이 납치되거나 PRT 요원이 납치되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방침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선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력을 같이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우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정부가 사전에 국민들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미리 설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주 좋으신 생각이고요. 그것은 국회의 토론 과정을 통해서 다 협의가,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우 의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희생이 마치 전혀 없을 것처럼 우리 정부가 나서서 홍보를 하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곤궁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기왕에 하는 파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서 떳떳하고 좀 당당하게 파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러한 병력을 보내는 데 따르는 위험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그 점은 국방장관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 국군포로 탈북자, 지금 현재 북경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정모 씨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제네바협약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 점에 대해서 중국에 어떤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제네바협약을 얘기하기 이전에 인도주의적인 면, 특히 일반 탈북자와 국군포로는 전혀 별개의 분류에 속한다고 합니다. 국군포로에 대한 송환은 국가의 의무이며, 모든 가용 수단을 다 동원해서 무사히 송환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 가용 수단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중국 정부에 대해서 정모 씨에 대한 한국 송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또는 노력을 취하고 계십니까, 현재?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군포로 문제는 중국 정부로도 매우 중요하게 또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공론화되지 않고 양국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로드맵을 발표하셨습니다.

현재 원안이냐 아니면 수정안이냐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 중에 이런 로드맵을 그래도 발표하신 것이 저는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아마 이것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총리께서는 총리실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총리실 등 행정기관 분리는 행정 수요자인 국민의 불편이나 공무원의 잦은 출장, 그다음에 국가 위기관리능력 저하 등 심각한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우 의원 만약 총리실이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NSC 구성 부서인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통일부는 현재 그대로 그냥 서울에 남게 됩니다. 원안대로 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총리 공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삼청동에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 그 옆에 또 대통령실장 공관도 있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그렇습니다.

○김영우 의원 그래서 총리 공관이나 대통령실장 공관이 그렇게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유사시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실장이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무총리가 세종시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원활한 정보 교환이나 비상시에 회의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긴급을 요하는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우 의원 지난 9월 6일 발생했던 임진강 참사를 기억하시지요, 우리 총리님?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김영우 의원 그리고 정부는 임진강 참사 이후에 북한과의 실무회담을 했습니다. 북한은 향후 댐 방류 시에 남측에 통보하겠다 이렇게 구두 답변을 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또 접경지역에서의 다양한 있을 수 있는 자연재해라든지 또 환경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무언가 남북 간에 접경지역을 위한, 접경지역 관리를 위한 공동관리위원회,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정부는 이미 지난 10월 14일 임진강 수해 방지 실무회담에서 임진강 등 남북 공유 하천에서의 피해 예방과 공동 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동 관리 기구를 구성하고 또 공동 규범을 마련하는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접경지역과 관련한 남북 간 논의를 보다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우 의원 예, 그렇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이전에 동·서독은 접경지역에서의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또 수자원을 관리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경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고맙습니다.

○김영우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9월 민간인 6명의 목숨을 앗아 간 임진강 참사는 우리에게 접경지역 관리 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이제는 남북이 함께 접경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접경지역 피해 예방은 물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남북한이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이 함께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접경지역 제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희상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학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경기 하남 출신 문학진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국민을 두려워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검찰·경찰은 물론 기무사와 국정원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런 정권을 많이 봐 왔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그랬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그랬습니다.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노태우 정권이 그랬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역사는 이 정권들을 권위주의 정권이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들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이러한 권위주의 정권들의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은 어떻습니까?

각종 현안에 대한 그릇된 판단과 전망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 불신과 국가적 혼란,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우리 국민을 죽음의 늪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십시오.

지난 10월 30일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을 확대하고, PRT지요, PRT를 보호하는 병력 파견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경비 병력이 PRT 경비 업무만 담당하고 전투에는 불참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중무장한 병력 자체는 이미 탈레반의 공격 대상입니다. 총리,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아프간 내에서 탈레반의 공격이나 테러 행위는 무장 여부를 떠나서 발생합니다.

○문학진 의원 동의하시지요?

정부는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파견 대상 지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100% 안전지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진 의원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한마디로 현재의 아프간은 전투병, 비전투병 구분의 의미가 없고 안전지대도 없는 전쟁터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전황과 치안 상황은 개전 이래 최악의 국면입니다.

탈레반이 국토의 70%를 재장악했고 테러 행위가 2008년 대비 15% 증가했고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 사망자 수는 작년에 295명에서 1.5배 늘어난 45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병력이 증파될수록 민간인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유엔 숙소가 피습당했습니다. 수도 카불의 치안까지 불안합니다.

개전 8년을 맞고 있는 지금 미국과 NATO 등이 치안과 아프간 주정부의 행정 역량 강화, 개발 원조 등을 위해서 26개의 PRT를 운영하고 약 11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NATO 등의 아프간에서의 그동안의 활동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런데 그것은 탈레반 등 극단주의 세력이 정규전으로는 미국과 NATO에 맞설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아프간 대선 정국을 계기로 무차별 테러 행위를 자행하기 때문입니다.

대테러 작전에 참가한 국가들은 아프간전 승리를 위해서는 아프간 주민들의 민심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작전 방식의 변화 등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진 의원 어쨌든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의 아프가니스탄 자불 지역 재건팀 책임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아프간 국민이 미군과 부패한 아프간 정부에 맞서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아프간의 현실입니다.

미군이든 국제안보지원군이든 지방재건팀이든 아프간 국민들의 눈에는 모두 부패한 아프간 정부를 돕고 있는 점령군으로 비친다, 이게 아프간의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철군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호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철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

해서 재작년에 철군했던 대한민국이 재파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사실 현실이 어떻느냐 하면 42개 병력 파견 국가 중에서 일부 국가는 감축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 스웨덴, 터키 등 여러 나라들은 대아프간 지원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프간 안정화,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제2기 민선 정부가 출범하는 현시점이 아프간 안정화에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유엔 등 국제사회의 기여 요청과 또 아프간 측 요청을 감안해서 이번에 대아프간 지방재건팀 파견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문학진 의원 42개국이 국제안보지원군에 파병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42개국 중에서……

이 군대가, 이 국제안보지원군은 NATO군의 지휘하에 창설된 치안유지군입니다.

그래서 42개국 중에서 NATO 관련국이 37개국이고, 호주 뉴질랜드 UAE 싱가포르 요르단 5개 국가만 NATO 관련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5개 국가 중에서도 UAE 싱가포르 요르단은 7명 내지 25명 정도의 소규모로 성의표시 정도만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아프간 재파병에 대해서 우리 국력 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에 파병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본 중국 이란 인도 이런 나라들은 군대 안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나 중국이 대한민국보다 국제적인 위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만하고 있나요? 답변해 보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일본 중국하고 한국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1950년에 6·25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을 비롯한 16개 유엔 가입국들이 와서 이 나라를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국력도 신장하고 국제 위상이 높아진 마당에 유엔에서, 또 아프간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 그것을 거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경제적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 기억이 맞다면 90년대 초반에 쿠웨이트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본은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했고, 한국은 군대를 파견한다고 하고 사실 군대가 파견된 다음에 전쟁도 안 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후에, 이런 것을 경제적으로 따질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국이 얻은 것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도 좀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학진 의원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이번 아프간 재파병 결정과정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어떤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실사단을 보내 가지고 파견지역과 규모를 정해 가지고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정부 입장 아닙니까?

저는 이 정부의 이런 결정과정 이게 문제다 이거지요. 실사단을 보내서 현지의 상황, 그다음에 PRT의 효과 이런 등등, 그다음에 경비병을 파병했을 때의 위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국민들한테 낱낱이 공개해 가지고 파병이 진짜 필요한지 그 여부부터 공론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어떤 것이 먼저 되어야 될지 잘 모르겠으나 우리 정부로서는 지방재건팀 설치를 위한 구체안이 마련되는 대로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을 드리고, 관련 법절차에 따라서 동의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진 의원 저는 지금의 아프간전쟁이 베트남전을 그대로 연상시킨다고 봅니다. 그때 남베트남 정권은 매우 부패했습니다. 지금 아프간 카르자이 정권의 부패 그에 못지않습니다. 오죽하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군 철군까지 거론하면서 부패척결을 요구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아프간이 제2의 베트남이 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렇게 서둘러서 졸속으로 재파병 결정을 할 게 아니고, 이것을 철회하고 우선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 가면서 대선 이후의 아프간 상황을 보고, 또 미국이 아직 지금 확실하게 정해지지도 않았잖아요. 미국 내에서 지금 의견들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지켜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답변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저는 이번 관계부처에서 시기를 잘 저울질해서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진 의원 그렇게 보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문학진 의원 제가 총리께서 지금 만약에 서울대교수 서울대총장으로 계시면 지금의 아프간전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발언을 했을지 그것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지금 총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서……

○국무총리 정운찬 적절한 비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진 의원 총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십시오.

한미 FTA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가 10월 달에 자동차 분야에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미 하원 청문회에 나가서 했고, 그리고 바로 어제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가 '자동차, 육류, 기타 상품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으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학진 의원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기왕 한미 정부 간에 체결된 FTA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 또는 협상내용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제안이나 요구를 해올 경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입장이었잖아요? 해올 경우 어떻게 하실 건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거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그간 수차에 걸쳐 밝혔습니다마는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제안이 올 경우 우리로서는 그것을 신중히 검토하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을 다시 하는, 소위 재협상을 하는, 협정 본문을 수정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문학진 의원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 의원 이게 엄연히 장관님 잘 아시지만 미국이라는 상대가 있는 건데요, 미국이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독립국가로서, 미국도 또 다른 독립국가로서 그쪽에서 미국 내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여러 사람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오바마도 대통령 후보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고, 자동차 분야를 주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고, 결국 이게 현실화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느냐 이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것은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앞으로 미국이 제안해오면 재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더 이상 공론화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미국의 최종 입장을 들어보고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의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까요?

한 1년쯤 됐는데요, 우리 정부와 한나라당이 '우리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빨리 처리하면 이게 미국에 압박을 주어서—압박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한미 FTA를 빨리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 외통위에서 전혀 우리가 동의할 수 없지만—우리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지만—불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동의안이 외통위에서 통과가 됐지요, 불법이지만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사정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1년 지났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한미 FTA는 사실 비준 시기를 이미 오래 전에 놓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시 정권하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던 그런 전례가 있고, 또 저는 오바마 정부도 한국 국회 외통위에서 이것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의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로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미국 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기는 현재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이 종결짓는 금년 말부터 내년 상반기 중의 기간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총리 다시 좀 나와 주시지요.

아까도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남북정상회담 추진설과 관련해서 올 국정감사에서 제가 속한 외통위에서 통일부장관에게도 물었고 외통부장관에게도 물었는데 다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아는 바가 없다, 그런데 아까 총리께서도 모른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문학진 의원 그러면 총리도 모르고, 외교통상부장관도 모르고, 통일부장관도 모르고 남북정상회담 접촉을 귀신이 하나요? 누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청와대의 고위 당국자 또는 핵심 당국자는 보도진에다가 사실상 확인을 해 줬거든요, 캄보디아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순방 때. 청와대 관계자가 확인을 해 줬어요. 그다음에 국정원장도 국회 정보위에 나와서 사실상 확인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국무총리도 모르고 담당 장관들도 모르고, 이것 누가 하는 거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줄곧 일관되게 주장을 한 게 남북대화, 남북관계 투명하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 아니었어요? 그러면 총리도 모르고 다 장관들도 모르면 귀신이 하는 거다, 비선이 하는 거다, 어떤 비선라인이 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얘기했던 투명한 남북대화 추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앞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민적 합의를 위해 알릴 것은 알리고 투명하고 당당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진 의원 제가 총리께 한 말씀 드립니다.

이 정상회담설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 청와대 당국자, 이런 식으로 익명을 통해서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는 걸 보면 북한이 몸이 달아 있다, 북한이 뭐 하지 못해서 매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막말들을 많이 내뱉거든요. 이런 것들이 남북정상회담 추진이든 아니면 건강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해서 현재 대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정제되지 않은 말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진 의원 그런 것들을 총리께서 좀 자제시켜 주시고 그런 발언들이 절대 보탬이 되지 않죠.

○국무총리 정운찬 예.

○문학진 의원 제가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언론에 상당 부분 공개가 됐어요. 따라서 추진을 하려면 공식라인을 통해서 당당하게 추진을 하자, 해라, 다음에 둘째는 제3국 싱가포르 얘기들 하는데 그런 데서 비밀접촉 할 게 아니라 특사를 보내서 남북을 왕래하면서 추진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도둑질 하는 겁니까? 남북 왕래하면서 상호 특사 보내서 추진해야 하고, 셋째 이런 조건 달지 말고 만나서 통 크게 해결하려는 그런 적극적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향후 정상회담이 추진된다면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문학진 의원 총리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개성관광 관련해서요. 지난 9월 4일 북한이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명의로 개성관광 재개를 공식 통지하는 통지문을 현대아산 앞으로 보내왔습니다.

9월 4일, 장관,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문학진 의원 그 내용 뭡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협의를 하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진 의원 그 내용은 개성관광을 재개하며, 요지만 얘기하면 현대아산 측이 요구하는 때에 실무접촉을 가질 수 있다, 이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현대아산이 이걸 통일부에 보고를 했는데 통일부는 기다려라, 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북한이 10월 20날 개성에서 실무협의 하자, 현대에 제안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다음에 관광 재개를 위해서 남측 당국이 대화를 제의하면 응하겠다, 이렇게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가만 있죠? 이유가 뭡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뭐 10월 20일 날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성관광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작년에 12월 1일 우리 개성관광을 중단한—북한이 중단했습니다—조치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고 물론 최근에 이제 이 문제는 자기들이 풀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성관광 문제도 역시 우리 관광객의 신변안전 문제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한 남북 간의 합의가 없습니다. 개성관광은……

○문학진 의원 그 문제……

잠깐만요, 장관.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문학진 의원 신변안전에 대한 문제는요, 지난 8월에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이 김정일 위원장 만나 가지고 관광 재개를 합의하면서 신변안전에 대한 의지를 명백하게 밝혔거든요. 보장하겠다, 그 보고도 받으셨잖아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것은……

○문학진 의원 그런데?

○통일부장관 현인택 북한이 최고당국자가 말로써 하겠다, 물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이런 예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미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에 관한 우리 인원의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이름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유성진 씨가 그간에 137일 동안 억류되는 사건이 지난 3월에 발생을 해 가지고 그게 겨우 137일 만에 끝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볼 때 기존의 이런 제도가 미약하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확실하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개성관광은 금강산관광과는 또 달리 그런 당국 간의 합의조차 지금 없습니다. 그건 사업자가 합의를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의존해서 해 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하여간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안전하게 예를 들면 북한에 체류를 하고 또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의원 장관 말씀 이해하겠는데요. 물론 우리 국민이 안전해야죠. 가서 사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러려면 장관이 얘기하는 그런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동의합니다. 그러려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만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건 뭐 저희가 소극적으로……

○문학진 의원 만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질질 끌고, 이명박 대통령이 기다리는 게 최고의 대북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장관의 대북전략 그겁니까? 똑같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니죠. 그건 저희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남북이 서로 합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합의를 향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문학진 의원 그럼 제가 달리 물을까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남북경협, 포괄적인 남북경협이 잘 되려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성관광, 금강산관광 이런 것들이 한 치도 못 나가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개성공단 문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저희가 꼭 북핵 문제를 연결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유성진 씨의 억류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내 여론이 굉장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겠다 해서 지금도 그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개성공단의 문제도 이걸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그런 제도적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삼통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특히 출입·체류 문제는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안 하겠다, 질질 끌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제대로 해야 이게 국민의 안전도 보장되고 개성공단도 발전할 수 있고 또 관광이나 이런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진 의원 장관 말씀 알겠는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우선 머리를 맞대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 실타래가 풀릴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 점은.

○문학진 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제주도 감귤이 생산이 요새 과잉이어서…… 잘 아실 거예요, 거기 출신이시고 하니까. 이걸 북한 보내기 사업을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했어요. 4만 8000t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데 어떻게 보고받고 계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문학진 의원 그걸 정부가 남아도는 감귤을 수매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보내는 이걸 10년 동안 해 온 사업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진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프간 재파병 문제입니다.

탈레반에 집중해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일반 국민들과도 맞서야 하는 곳이 아프간입니다. 탈레반이 경찰로 침투해서 총을 쏴서 다국적군을 죽이는 곳이 아프간입니다. 우리의 선의의 재건 사업이 그 나라 국민들 눈에 부패한 정권을 돕는 것으로 비쳐지는 곳이 아프간입니다.

정부가 바로 이런 곳에 명분도 없이 재파병하면서 어떻게 우리 병사들에게 목숨 걸고 헌신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신중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문학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순서가 진수희 의원님 순서입니다.

지역주민, 성동구에 사시는 서른일곱 분이 와 계십니다. 지금 질문을 한번 지켜보시겠다고 오셨습니다.

진수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희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성동 갑 출신의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하는 세계의 중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일방적 패권주의와 배타적 우월주의가 지나간 빈자리에 세계가 과연 어떤 지독한 실용의 단추를 채워나갈지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처럼 초강대국에 의한 일방적인 지구촌의 청사진은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예일대 리처드 레빈 총장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세계의 문제, 이제는 협력의 시대다'라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급변하는 세계 안팎의 도전과 시련에서 우리 스스로의 냉정한 자세와 국익 관철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경제위기에다 북핵 안보위기라는 중대한 도전을 맞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를 둘러싼 이 양대 위기는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한 무게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안이 터지고 현안이 생길 때마다 허둥대는 뒷북 대책으로는 우리의 국익을 온전히 지켜 낼 수 없습니다.

세계의 강국과 지역의 이해 당사국들의 예단과 통념을 뛰어넘는 전략적 상상력이 절실합니다. 협소한 시야를 벗고 글로벌 이슈에 과감하게 접근하는 적극성과 능동성이 더욱 요구됩니다.

총리, 나오시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막상 정부에 들어와 보시니까 밖에서 보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주 열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수희 의원 아무튼 이번 대정부질문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국정의 모든 분야를 두루 파악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내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외교적 기회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G20이 정례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G7이나 G8을 대체할 가능성이 대폭 커진 것

이지만 기존의 G8 회원국들의—뭐라고 그럴까요—지위 보존 욕구 때문에 단기간 내에 그 기능을 G20에 전면적으로 이양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G20이 핵심적인 포럼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G20의 실효성 확보 또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적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G20 회의에 나가서 주요 국제경제의 이슈를 잡아서 그것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한편 개발도상국 등 비G20, G20 국가가 아닌 회원국들의 관심사항을 포괄할 수 있는 의제를 주도적으로 발굴해야 됩니다.

정부로서는 신흥국 최초로 개최 예정인 내년 정상회의가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성공적 개최가 되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국가의 품격이라고 그럴까요, 국격을 높여서 한국의 이미지를 세상에 좋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의원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의제를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컨대 에너지안보라든지 빈곤 퇴치, 또 기후협약, 기후변화에 대비한 의제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면서 G20의 실효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출구전략 개발과 관련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경제 회복을 하고 있고 또 과거 IMF의 위기 극복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국제공조하의 출구전략 이런 것을 개발해서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것도 G20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 또 다른 의제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많이 있지만 우선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출구전략이라는 의제를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도 이해되고 또 장기적으로도 이해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경기 회복이 상당히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또 인플레이션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은 단기적 전략이고, 장기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계의 경제질서가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관리체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놓고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 개혁이라든지 금융규제 개혁 등 시스템 개혁도 논의하는 한편 식량안보,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최빈개도국 지원 등의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있게 되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한테도, 호감을 갖게 되고 또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뒤진 나라한테도 호응을 받게 돼서 우리가 G20의 일국, 또 정상회담을 내년에 한국에서 하게 됐습니다마는 그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수희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G20 국가 중에서 우리가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어떤 특화된 역할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보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지난 9월에 우리 대통령께서 제안을 하셨지요, 나마 레지스트리(NAMA Registry)라고요.

나마 레지스트리 설립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의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일본의 하토야마 이니셔티브하고 비교해 봐도 개도국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이 나마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고 또 세계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마라고 하는 것은 개도국이 스스로 시행하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국제적으로 인정해 주고 또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다른 나라들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스트 2012 기후체제에 대한 협상문 초안에 우리의 제안이 이미 반영돼 있고 또 각국이 우리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희 의원 그런 것들을 주로 감안하면 내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올해 12월에 예정된 코펜하겐 기후협약 정상회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상. 그래서 우리가 내년 정상회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일단 다음달로 예정된 코펜하겐 기후협

약 정상회의에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G20 국가들 가운데 EU 회원국들의 경우는 EU 차원의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EU의 단일한 입장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BRICs 4개국도 최근에 독자적인 정상회의를 통해서 협력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협상력이라든지 지역 대표성 이것을 함께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동아시아협의체를 구성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좀 중립적 입장에서 이 동아시아협의체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치열한 경쟁이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둘러싸고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EU는 EU대로, G7은 G7, G8은 G8대로, 또 어떤 나라는 G30 하자, G40 하자 해 가지고 상당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그간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아시아의 입장 반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수희 의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물론 여기에 포함해 가지고서 여기에 끼지 못한, 아세안 국가 중에서 G20에 끼지 못한 국가들도 포함해서 협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수희 의원 그 입장도 우리가 적절하게 대변해 줄 필요가 있지요.

제가 이틀 전에 저희 한나라당하고 중국공산당하고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 MOU 체결을 위해서 제가 중국에 다녀왔는데 그 자리에서 중국공산당의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과 면담도 했습니다.

그 면담 과정에서 왕자루이 부장도 동아시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하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G20 의장국, 또 정상회의 유치는 물론 우리 외교사의 커다란 쾌거입니다만 이제 우리 수준이 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인 가치를 환산한다든지 국가브랜드 제고 이런 데만 머무르는 어떤 개도국 식 발상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가지는 강점, 예컨대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가교 역할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그런 국가전략이 절실하다 하는 말씀을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지금 G20 회의를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좀 가볍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비교적 소극적 또는 자기비하적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를 중심과 주변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를 주변으로 생각했으나 앞으로 G20 정상회의가 아직 중심에 들어가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중심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회의를 잘 함으로써 우리의 위상을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회의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국가의 품격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금 총리실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그 일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우리들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진수희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지금 이루어 내고 있는 역할이나 성과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우리 국내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총리를 포함한 우리 정부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알겠습니다.

○진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ODA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셨으면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를 보시면 BRICs 국가와 우리나라의 지하자원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총 GDP를 비교를 해 보면 어떤 것도 우리가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향후 세계 경제의 리더국으로 역할을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원을 확보해야 하고 경제적인 영토를 넓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ODA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대외원조사업이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영토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해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경우는 2004년부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또 중남미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대외원조 규모를 대폭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에서는 천연자원 생산 또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인프라나 공공사업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질문은 안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국제질서의 새로운 흐름 즉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의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해외 ODA 현황은 지난 7년간 52억 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국가 그리고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향이 강해서 외부 변수에 따른 리스크가 대단히 큰 편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자원을 보유한 저개발 국가에 대해서 ODA를 한편으로 확대를 하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우수한 IT라든지 건설 등을 포함한 SOC 그리고 KSP 확대를 통해서 자원을 교환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원외교에 ODA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동감하실 것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진수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OECD 멤버로서 금년 하반기부터 소위 대외원조위원회—DAC라고 그럽니다—거기의 회원이 되고 하게 되면 우리가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외교정책 또 ODA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고를 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그러한 것을 그렇게, ODA를 어떠한 조건과 연계해서 우리가 추진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수희 의원 그러니까 장관님, 지금 ODA를 ODA 비율은 늘리고 유상원조의 비율은 낮추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더라도 ODA를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지금 우리가 우리만의 소프트 파워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대한민국의 경우 자원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고 또 IMF를 누구보다도 빨리 극복을 했고 또 현재의 글로벌 위기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점 이것은 다른 국가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우리만의 소프트 파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ODA를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성장 비결이라든지 위기극복 능력이라든지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이런 경험을 배우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윈윈 전략으로 갈 수가 있고 ODA도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요. 사실 저희 정부도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소위 맞춤형 개발 전략이라든가 또 지식 공유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우리 개발 전략 경험을 전수하는 Knowledge Sharing 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계 부처가 협의해서 그것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러한 측면에 착안을 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잘 참고하겠습니다.

○진수희 의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정부는 GNI 대비해서 ODA 비율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지 또 유상원조 비율 높은 것에 대해서 DAC에서 문제를 좀 지적을 받았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진수희 의원 그 유상원조의 비율은 또 어떻게 관리하실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유상보다는 무상원조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상이 한 67%, 유상이 33%인데 선진국 OECD 국가들은 거의 100%가 무상원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재부하고 장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서 점차 무상원조의 부분을 늘려 가는 그런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수희 의원 그러니까 무상원조를 그냥 무작정 비율만 늘릴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늘려 나간다면 저는 굉장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전체 규모도 현재 GNI 대비 0.09% 수준을 2015년까지 0.25% 수준으로 늘려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수희 의원 그리고 이 ASEAN 국가 외에 몽골 또한 이런 우리의 전략에 저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몽골은 아시는 대로 세계 10대 자원 부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가 광역두만강계획을 추진하면서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골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지역협력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 상황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몽골은 우리하고 매우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ODA의 주요 수원국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관계를 광범위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또 몽골은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서 착안을 해 가지고 지금 종합적인 맞춤형 개발원조 계획을 만들어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수희 의원 그리고 장관님, 지금 제가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텐데 외교부 차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재외동포청을 만들어서 그 일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청을 만드는 것보다는 만들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재외동포 권익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또 국가적으로도 그런 더욱 많은 예산과 인원, 조직을 늘려서 그만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진수희 의원 그런데 그 문제는 근시안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일은 아니고 이미 우리나라가 700만 명이 넘는 이런 해외동포가 있고 그 인구는 우리 전체 인구의 13%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지도에 보시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거주 현황 그리고 자원 분포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의 남쪽에만 매몰되지 않고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활용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시대의 국가 개념은 탈 영토 네트워크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재외동포청의 신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잘 알겠습니다.

○진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정황적인 근거에 비추어볼 때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서 많은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정상회담을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진수희 의원 저는 우리 정부가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선 제의했다는 보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럴 이유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저희 정부가 과민반응을 보인 게 뭐 있나요? 저희들은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수희 의원 자, 그러면 장관께서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면 여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여건을 말씀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일반적인, 어떤 원칙적인 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특히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남북관계에 좀 진정한 발전의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저희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꾸준히 밝혀 온 것입니다마는 하여간 어떤 차원에서든지 남북대화를 하

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혀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수희 의원 그리고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장소입니까, 아니면 북핵 문제를 제1 의제로 삼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특수이산가족, 국군포로라든지 납북자라든지 이런 문제입니까? 어떤 것이 최우선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인이자 여건이라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범주 안에 대답이 들어있지 않을까 합니다마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역시 또 중요한 것이고요, 남북 관계의 진정한 발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만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면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논의가 되지 않겠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진수희 의원 어떻게 물어보셔도 비슷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8·15 대통령 축사 때 재래식 무기 감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진수희 의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북한하고 재래식 무기 감축 협의를 하고 그래서 북한이 응하는 군축 정도에 대해서 거기에 상업적인 크레디트를 부여해서 대북 경제지원을 해 나가는, 말하자면 일종의 군축 크레디트를 만약에 북한에 제안을 해서 받아들이면 화해모드 조성과 함께 남북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나이브(naive)할 수도 있는데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가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군축을 하면 지금 존경하는 진 의원님 말씀은 거기에 상응해서 상업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해결하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군축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그런 방식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꼭 적절한 방법인가라고 하는 데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진수희 의원 그러면 지난번 대통령께서 축사 때 그런 내용을 제안하실 때 뭔가 구체적인 안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갖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남북 간 신뢰구축과 군축 문제는 이미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에 남북이 서로 기본적으로 하자고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남북이 의지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와 세계가 함께 겪는 새로운 모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형 중심이 사라지는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전략과 국가전략의 모델을 세워야 합니다. 만들어진 상황에 우리 자신을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상황을 만들어가는 큰 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입니다.

'We must change to master change.' 변화를 정복하려면 변화해야 합니다. 수많은 국난과 위기를 이겨낸 희망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꿈틀거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으로의 작은 차이는 통합으로 넘어서면서 우리는 세계로 향하고 세계는 한반도로 마음껏 들어오는 글로벌 코리아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진수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회의원 송영선입니다.

지금부터 정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께서 직접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불행하게도 저는 참여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송영선 의원 파병 결정만 하지요, 외교통상부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정책적인

틀을 건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송영선 의원 정부가 아프간 전후복구사업을 위해서 지역재건팀, PRT라는 것을 130명 파견하고 경비병력을 약 300명 정도 파병한다는 잠정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송영선 의원 그런데 장관님이 직접 참여 안 해 보셨으니까 PRT와 순수 민간지원활동하고를 구분 못 하시겠군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PRT의 개념은 순수 구호활동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지역을 하나 맡아 가지고 그 지역 재건을 위해 지방정부에 자문을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하는 포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송영선 의원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PRT는 점령군이 주도하는 재건활동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순수 민간지원활동하고.

미국이 파견을 요청해 온 곳이 세 곳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미국이 구체적인 요청을 해 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2001년에 시작해 가지고 매년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했고, 지난 10월 8일에도 유엔안보리의 만장일치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인적·물적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송영선 의원 그런데 지역이 님로즈, 다이쿤디, 카피사 세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송영선 의원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우리 정부가 PRT를 파견하고자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바그람이나 파르완주라고 했습니다.

이 다섯 지역 모두 안전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지금 아프간은 어느 지역이든지 100% 안전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안전한 곳만 우리가 찾아간다는 것도 그런 PRT 설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한 고려 요인이겠지요.

○송영선 의원 이 다섯 곳은, 지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민간인이 파견되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카피사나 바그람, 파르완주 모두가 카불 인근 지역입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1주일에 한 번 이상 탈레반 공격이 2008년 계속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국적군과 무장 저항군,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카불 바로 옆에 초록색으로 해 놓은 누리스탄은 알카에다 전투가 빈발하고 저기가 알카에다 오사마 빈 라덴이 숨어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미군이 소위 말하는 보급로가 막혀서 이곳에서 철수합니다. 그런데 이 철수가 영구적인 철수로 이어질 경우에는 카불이 바로 알카에다 본거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피사, 바그람, 파르완주가 전부 카불 바로 옆에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에 한국이 공헌하러 간다는 것이 명분이라면 이 목적에 맞는 파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전후복구라도?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아프간 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또 한 가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설치된 PRT가 24개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PRT를 탈레반이 공격해서 희생자가 난 적은 없습니다. 대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탈레반을 추격해서 싸우는 전투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PRT 자체를 공격해서 일어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선 의원 저 자신이 실제 PKO 교관훈련을 받았고 제가 PKO 나가는 사람들 교육시킨 사람입니다. 전후복구사업이 피크닉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잘 알고 있습니다.

○송영선 의원 그리고 PKO라는 이 'O'는 활동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해서 작전입니다.

평화유지작전 수행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지휘체계하에서 훈련받지 않은 민간인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파병 대상인 카피사나 바그람, 파르완주를 우리가 저번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했던 이라크 아르빌 지역이나 동티모르, 서부 사하라처럼 평온한 지역과 같이 생각하고 민간인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면 저는 파병계획을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 점령기간 중에 도로 매설 폭탄이 아주 치명적인, 미군에게 치명적인 살상무기였는데 탈레반이 그걸 더 개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살상무기냐 하면 최신예 미군 특수 장갑차량 그다음에 M1-A1 에이브럼스 탱크까지 뚫고 나갑니다.

물론 전쟁 지역에 재건 복구하러 간다고 해도 경비병이 가는 이유는 민간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갑니다. 민간인 순찰할 때 도로 매설 폭탄이 최고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경비병의 자위 수준의 방탄 능력으로는 민간인 경비는 고사하고 자신의 안전도 지키기 어렵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프간 전후 복구사업을 하기 위해 참여한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파병은 무엇보다도 파병 병력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형태로 되어야 됩니다. 파병 병력의 구조, 원점에서 재고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지금 존경하는 송영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매우 적절하신 지적이고,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국방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또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영선 의원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송영선 의원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통일부장관님이 하셔야 될 가장 중차대한 일이 뭡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남북의 관계 발전을 통해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저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선 의원 짧게 말해서 통일이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제가 통일……

○송영선 의원 궁극적으로 통일이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궁극적으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송영선 의원 그런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중국의 속국이 되는 통일한국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북한 자원과 경제가 송두리째 중국에 예속돼서 남북통일 이후에 남북이 함께 더 이상 개발시킬 것이 없을 때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상당수준 이미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2007년부터 중국과 북한의 고위급들이 발에 땀이 나도록 들락거렸습니다.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지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의 표명이겠습니다마는 북핵 문제가 아주 미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송영선 의원 북핵 문제 때문에, 가장 큰 이유로 간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송영선 의원 그런데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뒤로 하고 우리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이렇게 진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이해당사자국의 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선 의원 이해당사국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핵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다음 표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다시피 북한은 현재 아주 심각하게 중국경제에 예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대북 투자를 중국이 강화시켜 와 가지고 2008년에는 대북 1투자국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포린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투자의 90%가 중국 투자입니다.

지난 10월 4일 방북한 원자바오 총리가 2100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고 저 표에서 보다시피 7, 8가지의 경협 합의문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품 가운데 광물자원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한 40% 조금 넘는 걸로……

○송영선 의원 40%됩니다. 지금 북한의 광물지하자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은 액수는……

○송영선 의원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약 7000조 원입니다.

지난 8월 23일 조문단으로 온 김기남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북쪽 지하자원 중국 사람들이 다 퍼 가는데 왜 남측 동무들 와서 함께 하지 않느냐’고.

또 북한이 식량 42%, 원유 우리가 주는 걸 빼고 100%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동북 3성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북한 바로 경계 위에……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송영선 의원 이게 대중 교역액의 76%를 차지합니다.

중국은 두만강·압록강 유역에 인프라 개발사업 투자 확대하고 북한하고 동북 3성을 연결하는 둥벤다오 철도를 이미 건설해서 2011년 개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본격적인 대북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훈춘과 나진항을 연결하는 93㎞ 도로를 이미 건설해 줬습니다. 그 대가로 나진항 부두 개발권 확보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 관광협력사업을 대폭 확대해 가지고 북한을 관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물론 중국의 자국의 이익이 깔려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영선 의원 예?

○통일부장관 현인택 중국의 자국의 이익이 깔려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선 의원 중국의 자국의 이익만 있으면 북한은 왜 ‘예스’ 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물론 그것은 북·중 간에 서로 그런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지요.

○송영선 의원 어떻게 핵 문제를 중국이 풀어가려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하는 이유는 북한체제 급변사태나 붕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중국식 개방개혁을 김정일한테 아무리 받아들이라고 해도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끌어들입니다. 돈이 생기고 개방 개혁이 생기면 핵 개발 의지가 약화될 것이다, 포기할 것이다,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왜 합니까?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니까 그 위기 타개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북한의 대중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정치적 영향을 확대해서 북한 선점하고 중국 영향권 내에 둠으로써 한국과 미국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남북경협 레버리지(leverage)가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의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은, 저희 정부는 저희 정부의 소위 북핵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또 남북관계도 동시에 발전을 취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송영선 의원 동시에 취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이 연계되지 않는 그러한 남북경협이라면 또 그것은 그 자체로 매우 기본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선 의원 지금 사탕을 줘야 안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짜로 주자는 게……

저는 소모성 인도지원 찬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중국의 행동이 한반도 통일경제 구축을 철저하게 밑바닥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하고 통합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자원과 경제의 알맹이는 송두리째 중국 손으로 넘어간, 껍질만 남은 북한을 뒤늦게 우리는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껴안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북한이 중국을 제치고 우리와 먼저 경제협력, 공동개발 하자고 빌고 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해 줄 때까지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이 핵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통일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습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 현인택 분명히 있습니다.

○송영선 의원 그러면 북한에게 옥수수 1만t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1년을 고민하시지 말고 먼저 우리 건설장비를 제공한다든지 북한 자원개발에 남북 공동투자를 한다든지, 여기 제가 제시한 일을 본격적으로 해 나갈 의도가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저희 정부는 그간에 일관되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마는 북핵 해결과 더불어서 그것이 진척되어 가면서 남북경협도 또한 진척을 잘 시키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선 의원 빈껍데기 북한을 받아도 핵 폐기

라는 말 나오면 받아야 됩니까? 실속을 좀 차리자고요.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이라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 경제를 끌고 가야 됩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

○송영선 의원 그들은 우리에게 업이고 짐인 동시에 우리의 자산입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송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한반도 문제의 주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송영선 의원 말씀으로만 주도적으로 하시지 말고 좀 통일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우리 군 내부 보안시스템은 북한 해킹으로부터 안전합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앞에서 질문하신 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트라넷과 인터넷으로 되어 있는 그 시스템을 잘 이해하십니다마는 인트라넷 자체는 그 정도의 안전성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사용자에 의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인합니다.

○송영선 의원 몇 차례 북한이 이미 테스트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북한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명확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몇 번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송영선 의원 메모리 해킹이 뭔지 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것 들었습니다. 아직 제가 그 인터넷 분야에서 메모리 해킹의 정확한 기술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송영선 의원 이 메모리 해킹은 DDoS하고 다릅니다.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메모리 전체를 깨고 엉뚱한 내역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C4I시스템에 메모리 해킹이 일어나면 군의 지휘·통신·커뮤니케이션·정보 체계가 엉망이 됩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송영선 의원 그 메모리를 완전히 다 바꾸니까.

그렇다면 북한 내부가 인터넷 씁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송영선 의원 북한의 주민들, 북한 내부가 인터넷 씁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북한도 일부 지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영선 의원 국민들이 다 쓰지는 않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송영선 의원 뭘 씁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일반 국민들이요?

○송영선 의원 예.

○국방부장관 김태영 일반 국민들은 인터넷을 별로 활용을 못 합니다만 북한의 지휘부나 이런 데는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선 의원 극소수가, 지정한 소수가 씁니다. 인트라넷을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못 쓴다는 것은……

북한 국내발 IP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적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현재 저희가 추적돼서 아는 것은 대부분 중국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선 의원 그렇지요. 북한 국내발 IP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IP를 두고 빌려서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C4I시스템에 메모리 해킹이 일어나도 누가 한지 어떻게 알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필히 보안을 유지해야 할 곳은 인트라넷으로 지금 유지를 하려고 대부분 다 되어 있고……

○송영선 의원 그런데 전번에 인트라넷도 해킹이 됐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러니까 인트라넷의 해킹이라는 것은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송영선 의원 묻어오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과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의 잘못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막아 보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선 의원 자, 7월 달 DDoS도 국정원이 이것을 체신청의 IP 빌려다 썼다 하는 것을 지금 발표합니다. 뭐 일찍 발견했는데 지금 하는지 몰라도……

C4I 해킹 들어오면, 메모리 해킹 들어오면 대한민국 아수라장이 됩니다. 발견하는 데, 파악하

는 데 두 달 정도 걸리고 나면 대한민국 그때 없습니다.

군에서 사이버부대 만든다고 하시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송영선 의원 지금 만들어서 뭐합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송영선 의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2002년 사이버 테러 능력 확충을 국가적 사업으로 정하고 정찰총국 산하에 해커 1000여 명을 110호실에서 양성하고 사이버 테러 능력 확보를 핵이나 생화학무기와 함께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주요목표에 포함시켰다는 것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래서 저희도 올해 들어서부터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팀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아직 하나의 사령부 산하로 묶어서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각 부대별로 CERT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선 의원 자, 북한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지금 이 화면이 조선신보 홈페이지.

그다음 것 또 보세요.

조선통신 홈페이지.

이것 어디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송영선 의원 이것 어디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한의 조선통신 홈페이지 아니겠습니까?

○송영선 의원 예.

이것 우리 방에서 접속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북한은 주민들에게 인터넷 개방하지 않지만 남쪽에서는 누구든지 간단한 검색과 서버 조작만으로 북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습니다. 북한 사이트에……

○송영선 의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데……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 예.

○송영선 의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제가 잘…… 어떤 의미로,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송영선 의원 친북세력을 키우거나 우리 군 정보를 보내는 채널로 이용할 가능성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당연히 있습니다.

○송영선 의원 예.

지금은 군의 대처방안이 없다는 게 진솔한 답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인터넷에 의한 침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CERT팀이라는 것을 각 부대별로 상당히 많은 규모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선 의원 우리 보안시스템…… 전번에 DDoS 가지고, 7월 7일 DDoS로……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지금……

○송영선 의원 장관님!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송영선 의원 손해액이 얼만지 압니까, 하루 만에? 500억 추정입니다. 만약에 그게 은행 계좌에 일어났다면 얼마인지 압니까? 28조입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침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저희도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으면 저쪽은 또 저쪽대로 계속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더 앞서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서로 기와 능력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선 의원 우리 보안시스템의 심각한 문제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 비율로 한국이 전 세계 1위로 인터넷을 제일 많이 씁니다. 집에 창문이 많으면 시원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도둑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보안시스템, 무엇보다 군이 이것은 철저하게 강화를 해야 되지요. 이미 한발 늦었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군을 잘 알고 계시는 송영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선 의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고맙습니다.

○송영선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변 강국에 의해 둘러싸여져 왔습니다. 주변국과 상응한 경제력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통일을 중국이나 북한에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북한 자원과 경제개발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길이 바로 통일을 향한 정도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윤성 송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분 내내 총리 한 번도 안 부르고도 질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김동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서울 성동을 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며칠 전 북한의 요덕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2명의 탈북자가 영국 의회에서 증언한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하루 18시간 중노동에 폭행과 굶주림이 일상화되어 하루에도 30～40명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굶주림에 지친 나머지 죽은 사람의 입에 든 밥마저 내어 먹으려고 서로 아귀다툼을 벌이는 그런 상황을 증언을 했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그런 개, 돼지만도 못한 그런 상황에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던 북한 동포들이 북한을 탈출해서도 여전히 제3국을 떠돌면서 심지어 조국 대한민국에 와서도 조국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경우가 있어 이 이야기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동남아 국가들에 지금 많은 탈북자들이 출입국 규정을 위반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 나라들에서 지금 불법 입국으로 해서 벌금을 많이 부과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30불 내지 240불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김동성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 탈북자들이 돈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뭐 정말, 탈북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돈이 없을 때는 좀 거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몸으로 때운다고 합니다. 일을 한다는 뜻이겠지요.

○김동성 의원 그 몸으로 때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감옥살이 생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들의 경우에는 그 벌금을 낼 때까지 계속 억류를 해서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동성 의원 이것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가지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동성 의원 예.

○국무총리 정운찬 아까 박선영 의원의 질의에서 급히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문장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731부대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문장을 마치지 못해서 '항일독립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731부대는 일본이 항일독립군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던 세균전을 위해서 운영했던 부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장을 마치지 못했었습니다, 너무 빨리 말씀을 드리느라.

금방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당연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1인당 한 200불 정도 해도, 탈북자가 한 해에 한 3000명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총 소요되는 비용이 60만 불,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7억 원도 안 됩니다. 이런

정도의 비용을 우리가 들여 가지고 우리 동포들,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만 하나 좀 애로점이 있다면 해외에 체류 시에는 우리 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임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 것은 또한 현실입니다.

○김동성 의원 그것은 우리 대사관에서 확인해야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다음에 중국 선양에서 수천 킬로미터의 탈출 경로를 통해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9살 성룡이 얘기,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냥 짧게 들었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 성룡이는 엄마가 탈북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중국 동포이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탈북자 사이에 낳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중국 호구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룡이는 아직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녀야 되겠기에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학교는 다녔던 모양입니다. 지금 엄마는 강제 북송돼 가지고 북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성룡이처럼 중국에 호구 없이 사는 탈북자 자녀들,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시민단체들 추정에 의하면 약 3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구 없이 사는 탈북 여성들의 아이들의 국적 문제는 그 아이 아버지도 또 탈북자인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성 의원 자, 우리 국적법에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호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동성 의원 그런데 성룡이는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오히려 국내에서 불법 체류자로 해 가지고 추방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성룡이와 같은 아이들, 앞으로 더 생길 수 있는데 이것 정부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뭐 당연히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성 의원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정운찬 예.

(이윤성 부의장, 김형오 의장과 사회교대)

○김동성 의원 지금 엄마가 강제 북송됐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에서는 확인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확인만 돼도 국적 부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정부가 적극 나서 가지고 중국의 협조를 이런 정도는 얻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국군포로 문제는 아까 많은 의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가지만 덧붙이려고 합니다.

프라이카우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독일의 경우에 교회가 나서서 이 일 많이 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회가 중간 역할을 많이 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하려면 대한적십자사 같은 데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북한 핵 문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그런데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만 구체적인 문제는 국방장관이나 외무장관이 훨씬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괜찮으시다면 그분들께 대답을 의뢰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동성 의원 그러면 우선 외교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고맙습니다.

○김동성 의원 제가 전에도 한번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같은 질문을 다시 드려 보겠습니다.

외교부장관께서는 김정일 정권이 정말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공개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포기하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당위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성 의원 외교부장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말이지요, 김정일 정권은

결단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2년이 북한한테 어떤 해인지 알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설정한 해입니다. 강성대국 완성의 핵심이 바로 핵무기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강한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정일 정권이 이 핵무기 포기하겠습니까? 북한이 군사국가화 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 선군주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헌법에까지 명기를 했습니다. 국방위원장 지위 격상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이렇게 군사를 중시하는 정권이 군국주의정권인데, 또 군사주의에 의존하지 않으면 체제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주의의 핵심인 핵무기 포기하겠습니까?

핵무기를 붙들고 있으면 미국으로부터 군사 공격을 당할 가능성도 줄어들지요. 그리고 한미 연합전력에 비해서 재래식 무기 지금 부족합니다. 이것 한꺼번에 만회할 수 있습니다. 또 핵무기 붙들고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식량과 기름 갖다 줍니다. 이 좋은 것을 왜 포기하겠습니까? 저라면 포기 안 합니다.

다만 포기할 듯 포기할 듯 이렇게 시간 끌면서 다른 나라를 속이면서 경제적 이득만을 취하는 정책을 계속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94년도 있었던 제네바 핵 합의도 이런 시간 끌기용 기만전술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비아, 핵무기 개발 포기했지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런데 리비아가 핵무기 개발 포기할 때까지 유엔에서 엄청난 경제제재를 했었고 또 미군이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대규모 공습도 했었지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리비아? 괴로워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경우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군사적 옵션 가능합니까? 군사적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핵시설들을 군사 공격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왜냐, 그런 핵시설 공격은 바로 전면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전면전쟁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수도 서울, 북한 장사정포 사정거리 내에 있지요? 몇 시간 안에 서울 불바다 됩니다. 이것 김정일 정권, 잘 알고 있지요?

또 김정일 정권 핵실험한다 해 가지고 지금 유엔에서 1874호 경제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중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경제제재 동참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원자바오 총리 보내 가지고 북한에 한 보따리 선물 안기고 왔습니다. 이번에 원자바오 총리 가서 얼마나 안기고 왔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식량원조하고 일부의 개발원조를 했습니다마는……

○김동성 의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이것 정확한 것은 그냥…… 중국 정부는 스스로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다만 중국 정부는 이것은 유엔 안보리 1874호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을 할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해 왔습니다.

○김동성 의원 법적으로 분명히 위반되지 않을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엔 결의 1874호의 제재 효과를 반감시킬 수는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게 인도주의적인 것하고 개발에 관한 원조는 유엔 안보리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김동성 의원 어쨌든 경제 제재 효과가 분명히 반감될 것이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정부가 북핵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 그랜드 바겐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런데 그랜드 바겐 제가 볼 때 이것 말장난입니다. 내용이 모호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외교안보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통외통 국감 속기록을 다 읽어 봤어요. 그런데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의 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젠가는 선 핵 폐기인 것 같다가도 또 위원들이 공격을 하면 그게 아니라고 하시고 또 이행은 결국은 행동 대 행동으로 가 가지고 단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기존의 일괄타결이나 또

같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김정일 정권의 살라미전술에 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장난은 좀 걷어치워야 한다,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법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김동성 의원님께서 그랜드 바겐을 말장난이라고 하신 것은 조금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까지 북한이 지연 전술을 써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놓은 그런 구상이 알기 쉽게 그랜드 바겐이라고 표시를 한 거지…… 이것 용어 자체보다는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느냐를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북한은 지금까지……

○김동성 의원 그러면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든지 이게 내용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6자회담 과정은 동결에서, 불능화에서, 폐기에서, 핵물질, 핵무기, 핵무기는 저 동굴 구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적인 접근을 주축으로 했었는데 불행히도 북한이 2차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2006년, 금년.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제일 마지막에 다루려고 하는 핵물질, 핵무기를 먼저 그걸 가지고, 또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안전보장, 무슨 경제원조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냐 이걸 놓고서는 일괄타결해 가지고 그 집행은 시간 스케줄에 맞춰서 해 나가자, 그럼으로써 북한의 진실을 초기에 확인하자 하는 바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랜드 바겐을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지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하나도 변함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도 일찌감치 우리가 핵실험 이후에 5월 하순부터 협의를 했고 또 일본, 중국, 러시아와도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말장난으로 비하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저는 핵을 핵으로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현 국제정치 상황에서 쉽지 않다고 한다면 유사시에, 유사시라고 하는 것은 전쟁 징후가 임박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적의 핵시설을 선 타격해서 우선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능력 갖추는 것 중요하겠지요? 당연하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서 먼저 때리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아오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런데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보면 한마디로 형편없습니다. 제가 자세한 무기 상황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미군 정보능력이 아니면 한국군 거의 장님 수준입니다. 감시정찰 능력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휘결심 체제도 취약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DDoS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김정일 정권 해커부대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사이버전을 전담할 부대는커녕 이것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연구인력,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것 대폭 보완해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의원님, 좀 시간을 주시면 잠깐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성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닙니다. 제가 'YES, NO'로만 답변을 드리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보실 때는 '정말 국방부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너무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김태영 김동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고 먼저 때리고 또 경우에 따라 날아오는 핵무기가 있다면 요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다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면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정보 면에서는 북한의 그런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정보를 상당한, 충분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다 갖추고 있지는 못한 것은 제한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한미 간의 정보 노력을 통해서 상당 부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시정찰 능력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을 저희가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체 감시능력을 구비 및 보완하기 위해서

정찰위성에다 고고도 UAV 등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확보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런 확보하는 동안에는 계속 미국 측의 지원이 되도록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전 문제도 사이버전을 아까 여러 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사이버방호부대의 창설 등 이런 것을 병행해서 사이버 분야의 전투 발전 능력, 그다음에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타격용 정밀무기는 이렇습니다. 적의 북핵 관련 시설을 타격하는 데는 지대지미사일과 공군 전력으로 가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현재 저희 한미군이 다양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에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된다면 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과 공군 전력을 이용해서 적의 유도무기가 사전에 날아오기 전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고 저희가 북한보다는 보다 정밀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저희가 첫 발에 충분히 타격이 안 된 것이 확인이 되면 재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꾸준히 발전시켜서 국민들께서 너무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킬 계획은 있지만 우리 군 독자적으로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김동성 의원 전쟁 징후가 임박할 때 적의 타격목표물, 지난번 장관님께서 감사 시절에 북한 핵 관련 시설 100여 곳 위치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핵 관련 시설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전쟁지휘부, 전쟁기획시스템, 또 기타 전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 시설들까지 모두가 다 타격목표에 우리가 미리 선정을 해 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합치면 한 1000여 곳이 넘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 수많은 목표물들을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정밀유도무기, 제가 볼 때 많이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사거리 300km 이상 탄도미사일은 우리가 개발하지도 못하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사거리 300km 가지고는 함경도나 평안도에 있는 핵시설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왜 이번 SCM에서 그런 사거리 연장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이것은 앞으로 저희 정부에서도 여러 면에서 고민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 타격 능력에, 군에서의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고려사항이 아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정부의 위상이나 역할이 해야 할 부분, 또는 우리 독자적인 과학기술 능력의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결심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미 측과도 협조해 나갈 사항입니다.

○김동성 의원 국방부장관이 외교부장관처럼 말씀하시네요.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관철시켜야 합니다. 다음번 SCM에서 꼭 협의하십시오.

○국방부장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김동성 의원 우리 미사일 요격시스템도 지금 완벽하지 않습니다. 북한, 1000기 이상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요격률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우 떨어집니다. 이라크전에서 이라크가 아홉 발 미사일 발사했는데 미군이 다 떨어뜨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북한에 대해서도 꼭 그렇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때 이라크에서 사용했던 미사일들이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에 비해서 성능이 속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노동미사일 같은 경우에 속도가 무려 마하 7~9 정도 나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김동성 의원 대포동은 마하 12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총알 속도 알고 계세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총알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김동성 의원 총알은 마하 3이 안 됩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러면 노동미사일 같은 경우에 총알보다도 3배가 빠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라크에서 미군이 사용했던 패트리어트 시스템 일부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보다 더 좋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요격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얘기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보완하라 이 말이고요. 숫자도 패트리어트 미사일, 적습니다. 더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가 있고 북한도 오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외교부장관 다시 나와 주시죠.

아프간 파병국 42개국이고, 유엔 승인 얻은 거 맞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승인 사유는 대테러 전쟁 맞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김동성 의원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분명히 알카에다와 탈레반 그리고 불법 무장단체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김동성 의원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서 인적·물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결의가 되어 있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리고 아프간 탈레반이 알카에다 도운 거 명명백백한 사실이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김동성 의원 그리고 이와 같은 취지, 파병 촉구하는 그런 결의문 많이 나와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프간 정부조차도 이런 재건 지원 요청 많이 해왔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김동성 의원 6·25에서 다국적군들이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김동성 의원 무려 4만 명이 넘게 죽었고 10만 명이 넘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6·25전쟁에서 사망하고 부상한 그런 병사들 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남편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코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이름 모를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소중한 피를 흘리며 죽어간 병사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요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 가능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성 의원 불가능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김동성 의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북한 급변 사태 발생 가능한데 그럴 때 유엔의 다국적군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우리가 도움 요청할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좀 기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응분에 맞는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성 의원 지금 아프간에 폴란드 1910명 파병하고 있고, 루마니아 990명, 호주 1350명 등등 우리보다 인구나 능력이 모자라는 나라들도 더 많은 병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럼 우리가 인구가 4800만 명이고 경제 규모도 11, 12위면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우리의 여건에 맞는 능력에 맞는 또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김동성 의원 물론 테러 위험성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와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내어 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이상, 들어가십시오.

국가라는 것 정부라는 것 왜 필요한 겁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런 국가, 그런 정부가 도대체 뭣 때문에 필요하단 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그 가장 기본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으로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귀찮은 문제라는 이유로 우리가 등한히 하지는 않았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도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 소중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유가 북한에서 그리고 제3국에서 시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정부는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구걸하던 거지 국가에서 일어나 이제 시민으로 치면 중산층 되는 그런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아프간 파병도 바로 그와 같은 국격을 높이는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김동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의원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강동갑 출신 김충환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4년간 압축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난 64년을 단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광복 후 5년간은 국가건설기 또 6·25 이후 10년간은 전후 복구기 그리고 61년부터 20년 동안은 산업화기 또 80년부터 10년간은 민주화기, 90년부터 10년은 세계화기 그리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는 선진화를 추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시기별로 특징을 구분해 본다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추세로 간다면 향후 10년간은 민족 통일을 준비하는 기간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올해 G20 총회를 유치했고 세계 제2위의 무역 흑자국이 됨으로써 선진화의 큰 족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선진 외교를 위한 외교 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제가 파워포인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 내용은 뭐냐 하면 1991년 외교 수요를 1이라고 보았을 때 해외사건·사고가 약 9배 또 ODA 지원금이 약 8배, 국제기구 가입건수가 2배, 정상회담 건수가 5.45배, 수교국이 1.23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외교 인력은 1991년 이후 약 1.1배 정도니까 아주 극히 그대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또 두 번째 PPT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외교예산은 정부재정 대비 0.0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규모의 네덜란드를 볼 것 같으면 거의 5.5%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주 굉장히 높게 되어 있고 또 캐나다의 경우는 공관 인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이렇게, 2배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공관당 예산이 9100만 불로 되어 있고 캐나다는 1490만 불로 되어 있으며, 그런데 한국은 641만 불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형식적인 내용만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대외 무역 의존도가 90%를 넘고 있고 또 지금 OECD 또 G20 의장국 또 무역 흑자 제2…… 이렇게 가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외교 인력과 예산을 이대로 둬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저희들도 비슷한 생각으로 2009년도의 외교부 예산은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0.66%였지만 2010년에는 그것을 0.78%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외국의 학술회의에 가 보면 이웃 나라 일본이나 중국은 학술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을 정도로 외교관 수가 많

은 것 같은데 우리는 찾아보기 힘들고 또 외교 공관도 우리 국력에 비해서는 좀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김충환 의원 아까 진수희 의원이 아주 잘 지적해 줬기 때문에 길게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G20 회의를 내년에 한국에 유치한 것은 한국이 진정 이제 세계질서에 중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느냐 또 대접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각오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아까 말씀드렸지만 G20이 G7을 대체할 그야말로 글로벌 거버넌스로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첫째, 이제는 세계질서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되고 이것은 일반 국민들이 또한 따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젠다 세팅을 아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젠다는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앞선 나라도 흥미를 갖게 하고 또 우리를 따라오는 나라도 흥미를 갖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이 경기 침체를 벗어나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단기 엑시트, 출구전략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는 세계경제 질서가, 국제경제 질서가 아주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생산한 것보다 훨씬 많이 쓰는 나라이고 중국은 또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쓰는 나라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영어로 글로벌 임밸런스(Global Imbalance)라고 그러는데 이 글로벌 임밸런스는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장기적 출구전략이 또한 필요하고, 그 외에도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모든 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취업이라든지 이런 매력적인 어젠다를 내놓고 세계인들의 호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 기회에 비록 단기간에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품격,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품격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개별, 개개인의 인격의 집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착하고 약속 잘 지키고 말도 조심하고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 수준이 얼마나 되냐, 뮤지컬이 많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국가의 품격을 좀 높이는 계기로 삼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고 실행을 한다면 G20이 성공적으로 되고, 앞으로 G20이 G8을 대체할 글로벌 거버넌스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예, 그것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김충환 의원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유엔 사무총장이 한 번 되면 100년 만에, 기회가 안 온다 이런 말이 있듯이 G20 의장국이 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행사를 국민과 함께하는 또 이러한 회의의 의미를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국민에게 홍보해 주고 함께 참여하는 이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을 평가하는 여러 지표들을 보면 약 30위권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한국에 와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반한 인사가 된다' 외국인들이 그런 표현을 한 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 제2위의 무역흑자국, 말하자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해서 국가경제를 이끌고 또 세계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볼 때 이 세계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잘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격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세계화 촉진을 위해서는 국가의 품격을 높여서 성숙한 세계국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열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내년에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미에서 개인의 품격도 높이고 또 그것의 집적으로서 또 거기다 더 보태서 다른 여러

가지 합한 국가의 품격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정부와 민간 부분이 함께 우리 사회 전반의 의식, 관행, 제도 등을 전부 점검해서 개선해 나간다면 한국의 세계화 수준은 30위보다는 훨씬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서 30위로 평가받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넓은 의미에서의 국가의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자신을 폄하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 저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런데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우선 외국인들이 왔을 때 가이드가 없이도 혼자 다닐 수 있는 광고만이라도, 간판만이라도 좀 외국어가 병기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리께서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국무총리 정운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거기다 보태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관광지에 가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유적이 굉장히 훌륭한데 유적에 대한 설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반해서 외국의 중요한 관광 국가들은 어떤 유적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설명을 잘해 가지고서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런 면을 포함해서 여러 면에서…… 조심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제가 호주, 캐나다 이쪽에 보니까 인구는 적은데 땅은 굉장히 넓고 자원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국이 지금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쓰고 있고 또 아프리카도 중국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민 정책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민 정책 또 해외 동포들에 대한 이중국적 제도 또 해외 동포가 고국에 돌아왔을 때 이분들이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현재 우리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외에 나간 해외 이주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민국가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편의를 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가는 이민, 들어오는 이민 정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중국적과 관련해서는 우수 인재를 유치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결혼 이민자 등의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 복수국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해외 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서 취업을 지원한다든지 또 체류지원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또 체류자격별 특성에 맞는 법률정보 제공 등 아주 다양한 지원을 현재 조금씩 실시하고 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아까 다른 의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군 포로와 납북자 대책 이거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총리 산하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서 좀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정운찬 현재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총리 산하 대책위원회 설치 등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어젠다, 안건으로 올려놓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오늘 여야를 떠나서 모든 의원들이 다 이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무총리 정운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또 국민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운찬 예,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틀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충환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유명환 외교부장관님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FTA를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의원 이번에 아시다시피 일본을 물리치고 지금 무역 2대 흑자국이 되고 또 9위의 수출국이 됐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김충환 의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시행된 자유무역협정과 또 앞으로 추진될 협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 정부는 우리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협정이 됐고, 그다음에 EU하고도 지난달에 가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통과해 주신 한·인도 FTA에 대해서도 이 기회를 빌려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통과해 주신 태국과의 서비스 무역 협정에 대한 것을 해 주심으로써 이제 아세안하고도, 전체 아세안 열 나라하고도 FTA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에 중남미 국가, 특히 페루, 콜롬비아 등 주요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고 있고, 또 GCC라고 그래 가지고 걸프 국가, 이쪽 중동아시아, 아프리카 쪽하고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함으로써 한 가지 걱정은 그것으로써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는 농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농가에 대한 이 대책은 2007년 11월에 이미 한미 FTA를 대비해서 우리가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1조 원을 향후 10년간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모든 연구기관의 통계를 보면 11개 연구기관에서 향후 15년간의 농어촌의 피해액이 약 10조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피해대책 규모가 21조라는 것은 피해예상 10조의 2배가 넘는 그런 규모기 때문에 충분한 농어촌 대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현재까지 된 FTA가 약 11%가 커버되고 있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의원 이것을 빨리 하여튼 30% 내지 다른 적극적인 나라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제가 이번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갔다 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신아시아 구상 여기에서 호주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까지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큰 골간으로서 아세안 10개국 소위 10+3이라 그러는데, 아세안 10개국에 3이라는 것은 한국, 일본, 중국입니다. 그래서 아세안+3 포뮬러(formula)를 끌어왔는데 거기에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또 하나의 동아시아정상회의, EAS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일본이 주로 좀 이렇게 하고, 해서 그 관련해 가지고 일본과 중국과 아세안과 약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국은 그러한 것을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하여튼 이 아시아공동체는, 이제는 신아시아 정책이 어쨌든 오스트레일리아, 또 인디아가 같이 참여하는 균형 있는 이러한 지역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최근에 한미 간에 그랜드 바겐, 또 남북정상회담, 아프간 지원 문제 등과 관련해서 약간의 미묘한 불협화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재발 방지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솔직한 감정은 제가…… 그랜드 바겐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꾸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담당하는 그런 책임자로서 그런 불협화음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는 목적이 같고 수단에 있어서 좀 조율을 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이 같으냐 아니냐, 또 그것을 가는 길에 있어서 장애물에 대한 인식이 같으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언어로 표현된 한마디 가지고 그러한 것을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한미 공조를 중요하다고 하

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또 우리가 먼저 이니셔티브를 쥐고 여러 국가가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아주 미묘한 약간의 언론의 보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소화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충환 의원 어쨌든 이 한미 동맹 또 한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가까울수록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국민들 마음속에 불안이 느껴지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국가 브랜드 강화와 또 상품 판매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해서 문화외교를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한류가 동남아시아 또 중앙아시아까지는 굉장히 퍼진 것 같은데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장관께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김충환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문화관광부하고 외교부가 힘을 합해서, 지금 더군다나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설치돼 가지고 관계 부처 간에 힘을 합해서 문화외교에 많은 관심을 두고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외교부로서도 문화외교의 중요성 또 한류의 확산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저는 우리 한국이 이렇게 무역, 통상 관계에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물론 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원인도 있고 또 우리 외교부장관이 노력을 한 덕택도 있지만 그 바탕에는 한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것이 잘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뉴질랜드의 경우에 한국 교민들이, 영주권자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투표율이 2%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교포들이, 또 동포들이 투표를 할 때 투표율이 너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투표율이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김충환 의원 투표하러 오는, 그냥 자동차를 타고 모여들기 어렵다 이런 얘기지요, 공관투표를 하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직은 집행, 실행이 안 됐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권, 참정권에 관한 말씀입니까?

○김충환 의원 예.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직은 그렇게…… 2012년에 가서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결정에 따라서 행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와 같은, 즉 대사관에 와서 또는 영사관에 와서 투표를 하도록만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투표율을 높이는 데 매우 제약요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편투표 문제를 국회에서도 좀 신중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김충환 의원 아까 뉴질랜드의 경우에 뉴질랜드 영주권자들이 뉴질랜드 선거에 투표하는 율이 2%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죄송합니다. 저는 거꾸로 알아 들었습니다마는, 뉴질랜드 동포들이 뉴질랜드 국회의원들을 뽑는 데 참여하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은 현지 교민이 주류사회에 진입하도록 지금 여러 가지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것은 그 나라에 거주하는 국가의 제도와 법률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충환 의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지원 인력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유엔이나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있었는데 그것을 국민들에게 너무 알리지 않은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뭐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유엔안보리 결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충분히 기회 있을 때마다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국제 문제에 대해서 좀더 외교부로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아까 김동성 의원님이 보여 주신 그 표를 보면 42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 의원 또 여러 차례 유엔과 동맹들의 협조와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그동안 좀 무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 홍보활동에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조건 없이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조건이 맞아야 한다,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북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자꾸 조건과 원칙을 제시하게 되면 사실상 대단히 지연되지 않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라도 조건 없이 일단 정상이 만나는 것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고 또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남북정상회담에 무슨 정부가 특별하게 조건이 있어야 만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북핵 해결이 꼭 돼야 된다든가 이런 조건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남북관계가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아마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조건은 아니고요, 그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 할 이유는 저도 없다고 봅니다.

○김충환 의원 최근에 북한에 옥수수 1만t을 보내기로 한 것은 아주…… 조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하는 거니까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것을 1만t에 그치지 말고 점점점 늘려서 우리 동포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잘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해 나간다 하는 원칙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또 지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도 하여간 사정이 허락하는 한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작년에 5만t 주기로 한 것은 아직 유효합니까, 아니면 끝난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두 차례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거절을 했고 또 그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는 그런 국면이 있었습니다.

경색 국면의 원인은 당연히 작년에 금강산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 또 올해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라든지 미사일 수차례 또 문제가 있었고 또 핵실험에 이르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 남북 경색이 됐습니다마는, 하여간 그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식량 상황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거고 또 남북 간 관계도 우리가 좀 보면서 하여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하여튼 주기로 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전달해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다음에 북핵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제 400억 불로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김충환 의원 그것을 위한 신탁기금을 설치해야 된다, 지난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김충환 의원 그 문제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래서 이제 북핵 문제가 해결…… 지난번에 김충환 의원님이 하신 국회 토론회에서 이제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면 북한 신탁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을 통해서 북한을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런 제안이 있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도 그 말씀이신데, 저희가 비핵 개방 3000 정책 구상도 마찬가지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에 이르는 데까지 저희들이 남북협력을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중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한 400억 달러의 기금을 저희들이 조성하는 그런 방안도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의 일환으로서 북한신탁기금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충환 의원 어느 날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경우를 대비해서 충분한 심사숙고를 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탈북동포들의 생활보호…… 지금 현재 탈북동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의료비를 자기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겨우겨우 버티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지원금도 없어지고 의료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탈북동포들이 취업을 하기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좀 제도 개선을 해서 취업을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특별히 만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지금 대한민국의 정착 문제가 저희 통일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저희 통일부의 재정적 능력이 조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북한 이탈주민들의 건강 문제입니다. 많은 이탈주민들의 대부분 한 80% 정도가 예를 들면 치아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원에서 한 3개월 정도 있는 사이에 치아를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치아를 바꾸는 데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원을 나와서 사회에 정착을 하게 되면 의료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사회가 마땅히 이들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충실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희 정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현 장관님은 통일부장관이시니까 탈북동포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연고가 없고 여러 가지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과 같은 역할, 형님과 또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김충환 의원 그래서 과거 2004년 이전에는 30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지금 1800만 원밖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최저생활 빈곤자로 내려가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통일이 어렵지 않겠느냐……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 당국자 간 대화를 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당국자 간의 대화를 하여간 저희들이 딱 내일모레 이렇게 시기를 박아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신변 안전 문제에 대한 제도화를 위해서는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도 그 말씀을 조금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출입·체류에 관한 확실한 제도화를 통해서 앞으로 관광 문제라든지, 특히 개성공단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이 많이 체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관광이 재개가 만약 된다면 북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안전하게 방문하고 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서로 남북이 완벽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여간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당국자 간 대화를 곧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는, 아마 그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또 물론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

여간 저희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제 생각은, 아까 송영선 의원이 워낙 아주 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 생각입니다.

최근에 나온 이 보고서들을 보면, 미국과 유럽에서 나온 보고서들의 공통된 점이 뭐냐면 중국은 북한을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조만간에 대화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국만 이렇게 정상회담도 원칙과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하고, 중간 단계의 계획도 아직 때를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는 하려고 하는 아주 최하위 단계의 당국자 협상도 지금 대화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당국자 대화를 빨리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결론적으로 말하면 빨리 금강산…… 금강산은 좀 미룬다 하더라도 일단 개성공단 또 개성관광 문제는 풀어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지난 한 두어 달 내에도 이산가족 만남도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한 실무회담도 있었습니다. 또 임진강 사태에 관한 실무회담도 있었고 또 사실 지난 봄에 개성공단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을 때도 실무회담이 네 차례나 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나 몰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정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김충환 의원 하여튼 제가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김충환 의원 개성공단의 진입로 문제, 기숙사 문제, 통근버스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이제 그 문제도 결국 이것은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북측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제대로 되려면 3통문제 같은 것도 좀 풀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문제, 출입 체류 문제가 사실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상호간에 좀 논의를 해서 같이 풀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숙사 문제도 개성공단의 기업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입로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그간에 많이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탁아소 문제는 북한과 그런 것 없이 저희들이 지금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내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탁아소 문제도 저희들이 해결을 했고 또 군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자재 장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일들이 남북 간에 진전이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충환 의원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 또 우리가 볼 때 너무 많이 기다리는 통일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한 번 더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 의원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 어느덧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무역 환경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진 외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향후 10년은 평화적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남북이 신뢰를 증진하고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하겠습니다.

미증유의 국제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고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선진한국과 통일조국을 이룩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오 김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충조 의원, 이경재 의원, 김성조 의원, 최연희 의원, 이용희 의원, 권영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체력이 좋아서 그러신지 마지막으로 갈수록 길고 소상하게 답변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핵심적으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의 김충환 의원 지역구에서 오신 네 분 의원도 끝까지 방청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1월 9일 월요일 오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0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고승덕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영진	김금래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지원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성남	이성헌	이시종	이애주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해규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　영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철국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3인)

김영록	김진애	정범구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 의정서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3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고승덕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영진	김광림

김금래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지원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성남 이성헌
이시종 이애주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해규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 영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철국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3인)

김진애 변재일 정범구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2인)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고승덕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영진 김광림 김금래
김낙성 김동성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지원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성남 이성헌 이시종
이애주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해규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 영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철국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황우여 황진하

기권 의원(5인)

강성종 김영록 김진애 정범구
최영희

○출석 의원(256인)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운태
강창일 고승덕 고홍길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시종
이애주 이용경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병국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개의 시 재석 의원(160인)

강길부 강명순 강성천 고승덕
권경석 김광림 김금래 김무성
김부겸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유정 김장수
김재경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문학진
박근혜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상돈 박상은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지원 박 진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재현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손범규 손숙미 송민순
송훈석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대평 심재철 안규백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우윤근
우제창 원희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계진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용희
이윤성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종혁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장제원 전여옥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배숙 조윤선 조전혁
조진형 주광덕 주호영 진성호
진 영 차명진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속개 시 재석 의원(72인)

강길부 강명순 강성천 권영길
권영진 김광림 김동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장수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혜성 김희철
노철래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박보환 박선숙 박지원 배은희
서병수 서종표 신영수 신학용
안경률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원희목 유성엽 유일호 윤상일
윤석용 이계진 이성남 이애주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진복
이춘식 이혜훈 임동규 정갑윤
정범구 정수성 정영희 정옥임
정장선 정진섭 정하균 정해걸
최병국 최연희 최철국 허 천
홍사덕 홍일표 홍재형 황진하

○산회 시 재석 의원(66인)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권경석
권영길 김낙성 김동성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순 김성조
김소남 김영록 김옥이 김유정
김을동 김재윤 김 정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형오 김혜성 김희철
노철래 박보환 박선숙 박지원
배은희 송영선 송훈석 신상진
안상수 양승조 우윤근 원희목
유일호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이두아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용희 이윤성 이은재 이정선
이찬열 이한성 이화수 전현희
정갑윤 정영희 정장선 정진섭
정하균 정해걸 진수희 최연희
추미애 허 천

○청가 의원(13인)

곽정숙 남경필 박주선 박희태
송광호 안민석 이미경 이상민
이용삼 이종걸 조영택 최경환
홍희덕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박 계 동
입 법 차 장 안 병 옥
의 사 국 장 이 종 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정 운 찬
외교통상부장관 유 명 환
통 일 부 장 관 현 인 택
국 방 부 장 관 김 태 영
행정안전부장관 이 달 곤

【보고사항】

○의안 제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09. 11. 5 양승조·조영택·최영희·송민순·김춘진·백원우·전현희·최재성·박은수·강창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갑원 의원 대표발의)

(2009. 11. 5 서갑원·신학용·김상희·양승조·박은수·김성순·강운태·우제창·백재현·김우남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09. 11. 5 김학용·조진형·이학재·유정현·이사철·이병석·유정복·정희수·김성수·진성호·이한구·김성태·이진복·홍사덕·황우여·여상규·이범래·안홍준 의원 발의)

11월 6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메세나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

(2009. 11. 5 이성헌·김성수·정옥임·이정선·이철우·이종혁·김세연·권영진·이한구·이진복·안홍준·황영철·여상규·이은재·유정현·김학용·이범래·진성호·허원제·유재중·김용태·권택기·한선교·김성태·박근혜·김정권·김창수·김선동·조윤선·손범규·김옥이 의원 발의)

11월 6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

(2009. 11. 5 이성헌·김성수·정옥임·이정선·이철우·이종혁·김세연·권영진·이한구·이진복·안홍준·황영철·여상규·이은재·유정현·이범래·김학용·진성호·허원제·유재중·한선교·김성태·김정권·김창수·박근혜·김선동·조윤선·손범규·김옥이·권택기·김용태 의원 발의)

11월 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

(2009. 11. 5 신낙균·김우남·송민순·김정권·김효석·이명수·유성엽·조영택·강기정·최인기·우제창·박영선·안규백·박주선·이미경·김재윤·손범규·김상희·박은수·강기갑·곽정숙·김춘진·강창일·최영희·문학진·이용섭·정동영 의원 발의)

11월 6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2009. 11. 5 김정훈·안상수·이명규·정옥임·신성범·안경률·안효대·김정권·김성회·현경병·이인기·신지호·김성태·김효재·정미경·임해규 의원 발의)

11월 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2010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2009. 11. 5 정부 제출)

11월 6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2009. 11. 5 임동규·안효대·원희목·이명규·이철우·김성회·박순자·허천·김태환·이종혁 의원 발의)

11월 5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地域保健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9. 11. 5 이명수·주광덕·유성엽·김을동·이주영·임영호·정옥임·주승용·김유정·정영희·양승조·이해봉·박상돈·김창수·김용구·정의화·이은재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09. 11. 5 전현희·최철국·백원우·송영길·최영희·박은수·주승용·문학진·박민식·우윤근 의원 발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9. 11. 5 이명수·주광덕·유성엽·김을동·이주영·임영호·정옥임·주승용·김유정·정영희·이해봉·박상돈·김창수·김용구·정의화·이은재 의원 발의)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9. 11. 5 이명수·김용구·권선택·신학용·이상민·정의화·박상돈·김창수·김을동·임영호·이은재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9. 11. 5 이명수·주광덕·유성엽·김을동·임영호·정옥임·주승용·이해봉·박상돈·김창수·정의화·김용구·이은재 의원 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9. 11. 5 이명수·주광덕·유성엽·김을동·임영호·정옥임·주승용·이해봉·박상돈·김창수·정의화·김용구·이은재 의원 발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9. 11. 5 이명수·주광덕·유성엽·김을동·임영호·정옥임·주승용·이해봉·박상돈·김창수·정의화·김용구·이은재 의원 발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09. 11. 5. 최영희·김상희·김춘진·김효석·노영민·박은수·박지원·송민순·송영길·양승조·우윤근·이미경·전혜숙 의원 발의)

이상 8건 11월 6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09. 11. 5 최영희·김상희·김춘진·김효석·노영민·박은수·박지원·송민순·송영길·양승조·우윤근·이미경·전혜숙 의원 발의)

11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09. 11. 5 이명수·김용구·권선택·이상민·정의화·박상돈·김창수·김을동·임영호·이은재 의원 발의)

11월 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

(2009. 11. 5 황진하·김성회·김정권·이한성·심대평·권경석·정진석·김영우·장윤석·정진섭 의원 발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2009. 11. 5 장윤석·정진석·박진·최규성·황영철·이은재·허태열·노철래·조영택·손범규·홍일표·이한성·유정현·이인제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6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의안 심사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

태국왕국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

(이상 2건 2009. 4. 6 정부 제출)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2009. 8. 26 정부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보고

○보고서 제출

2008년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리계획 보고

(2009. 11. 5 정부 제출)

국방위원회에 회부